

통일예측모형 연구: 지표 개발과 북한체제 변화 추세 분석

박 영 호
김 지 희
서 재 진
임 강 택
정 영 태
조 민
조 한 범
허 문 영
홍 관 희

통일에측모형 연구: 지표 개발과 북한체제 변화 추세 분석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3. 지표 개발과 설문 조사 — 5	
II.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념적 설명	11
1. 북한요인 — 11	
2. 남북관계요인 — 62	
3. 국제요인 — 79	
4. 남한요인 — 88	
III. 북한체제의 변화 추세: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104
1. 정치 — 104	
2. 사회 — 116	
3. 경제 — 123	
IV. 통일에측모형: 북한변수 중심	139
1. 체제응집력(요인1) — 142	
2. 남한체제 동경(요인2) — 145	
3. 김정일의 체제강악력/통제력(요인3) — 148	
4. 경제의 정상화(요인4) — 151	
5. 경제의 자율화(요인5) — 153	
6. 사회갈등(요인6) — 157	
7.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 의지(요인7) — 161	
8. 주민이동의 자유(요인8) — 164	
V. 북한 요인에 따른 통일시기	167
1. 통일지수 분류 — 167	
2. 통일시기 예측 — 169	
부 록 [북한실태에 관한 의식조사 설문지]	178
참고문헌	197

표 · 그림목차

- <표 II- 1>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 26
- <표 II- 2> Euromoney의 국가신용등급 주요 평가항목과 내용 — 28
- <표 II- 3> 1970-80년대 중국의 개혁 정책 — 30
- <표 II- 4> 체제전환국들의 분권화 초기정책 — 32
- <표 II- 5> 개혁·개방정책 확대 과정에 따른 북한군대 변화 양상 — 61
- <표 II- 6> 서독 거주자의 동독 및 동베를린 방문자 및 동독 연금수혜자의 서독 방문자 현황 — 68
- <표 II- 7> 중국 국민의 대만 방문 현황 — 69
- <표 II- 8>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 현황 — 70
- <표 II- 9> 연도별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 현황 — 71
- <표 II-10> 동서독 교역 규모 — 72
- <표 II-11>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 — 75
- <표 II-12> 북한무역총액 대비 남북교역 점유율 — 75
- <표 III- 1> 정치관련 설문 결과 — 112
- <표 III- 2> 사회관련 설문 결과 — 121
- <표 III- 3> 개혁·개방 필요성 및 기대감에 대한 설문 결과 — 129
- <표 III- 4> 정책결정의 분권화에 대한 설문 결과 — 132
- <표 III- 5> 시장요소의 도입에 대한 설문 결과 — 135
- <표 III- 6> 소유제도 다양화에 대한 설문 결과 — 137
- <표 IV- 1> 북한실태설문조사 요인분석 결과 — 141
- <표 IV- 2> 체제응집력 요인의 추이 — 144
- <표 IV- 3> 남한 체제동경 요인의 추이 — 147
- <표 IV- 4> 김정일 체제 장악력/통제력 요인의 추이 — 150
- <표 IV- 5> 경제정상화 요인의 추이 — 152
- <표 IV- 6> 경제자율화 요인의 추이 — 155

- <표 IV- 7> 사회갈등요인 추이 — 159
- <표 IV- 8>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지 요인의 추이 — 163
- <표 IV- 9> 주민이동의 자유 요인 추이 — 165
- <표 V- 1> 기능별 지수 — 168
- <표 V- 2> 부문별 지수 — 168
- <표 V- 3> 체제유지 기능 지수의 추이 — 171
- <표 V- 4> 체제변화 기능 지수의 추이 — 173
- <표 V- 5> 통일지수 추이 — 176

- <그림 IV-1> 체제응집력 Linear Trend Model — 144
- <그림 IV-2> 남한체제동경 Linear Trend Model — 147
- <그림 IV-3> 김정일 체제 장악력/통제력 Linear Trend Model — 149
- <그림 IV-4> 경제정상화 Linear Trend Model — 152
- <그림 IV-5> 경제자율화 Linear Trend Model — 156
- <그림 IV-6> 사회갈등 Linear Trend Model — 160
- <그림 IV-7>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지 Linear Trend Model — 162
- <그림 IV-8> 주민이동의 자유 Linear Trend Model — 166
- <그림 V-1> 체제유지 기능 Linear Trend Model — 171
- <그림 V-2> 체제변화 기능 Linear Trend Model — 174
- <그림 V-3> 통일에측모형 Linear Trend Model — 177

I. 서 론

1. 연구 목적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를 경제적 난관과 외교적 고립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을 지켜본 북한 관찰자들 사이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 즉 붕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북한연구의 테마로서 대두되었던 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유럽의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 정치문화 환경, 정치이념체제, 경제적 수준 등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북한체제의 내구력 내지는 지속성을 예측한 전문가들이 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나 불기측성이라는 회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이란 기치 하에 추진하고 있는 북한식의 ‘개혁·개방’정책은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서 모두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변동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개혁·개방’정책의 확대 도입으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통일과정으로의 점진적 진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가목표의 실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명백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북한문제 연구의 현실이다. 북한체제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통일의 유형이나 통일의 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인들 모두에게 늘 해답을 원하지만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통일 논의가 있었다. 흔히들 통일의 시기나 통일의 유형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 조사를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기대치를 측정하거나, 또는 통일의 유형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분류하여 통일의 과정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¹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정성적이며 추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통일의 시기나 방법을 논의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물론 방법론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또 타 사례 연구를 통한 비교 분석이나 학문적 검증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일 연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정량적인 지표를 동원하여 통일을 예측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하는 것이 사회과학이 지향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은 여전히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의 간단없는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1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에서는 2002년에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제목 아래 이론적 모델과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연구하였다.

변수들을 설정하고, 체계적 모델의 구축을 통하여 통일을 예측 가능한 과정으로 실제화 시키는 통일예측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통상적으로 질문되는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모두 동원하여 객관적인 답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일의 예측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분류하여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학문적인 통일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최적의 통일모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사회과학분야에서 어떤 분석 모형이나 예측 모형을 만드는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활용하여 연구 주제에 맞게 변용시키거나 기존의 연구 모델을 활용하여 응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 유형이나 통일의 유형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집권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재정, 금융, 무역 분야에서의 개혁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와 가격, 농업, 기업, 경제관련 법률 분야 등에서의 개혁과 같은 미시경제지표들을 이용하여 여러 나라의 사례를 교차 비교분석한 결과로 얻어진 준거를² 북한경제의 변화 추정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내구력을 전망하기 위하여 브레진스키

2 Pradumna B. Rana and Naved Hamid, ed., *From Centrally Planned To Market Economies: The Asian Approach* (Hong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Zbigniew Brzezinski)의 사회주의체제 위기지표³ 응용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도 있다.⁴ 통일의 유형과 관련한 연구로서는 미국의 스탠포드연구소(SRI)가 개발한 기업경영 예측과 대비를 위한 'SRI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예를 지적할 수 있다.⁵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떤 특정한 모델이나 유형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면서도 본 연구에 참여하는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들의 그동안의 연구 경험에서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집중 워크숍 및 토론의 방식을 통하여 통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류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향후 통일에 측과 관련한 과학적 분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다 적실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과 변인들을 분류하는 데 우선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북한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북한 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할 필요성에 착안하여 북한체제의 변화추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통계학적 방법론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연구방법론 전공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
- 3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 4 김성철 외, 『북산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5 구중서 외,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5).

3. 지표 개발과 설문 조사

통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의 비중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룩하였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다시 분열상을 보인 후 결국 무력통일로 귀결된 남북예멘의 경우는 무력의 우열 여부가 최종적인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서독의 경우는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인 해체, 동독 내부의 반체제 저항, 서독의 압도적인 국력 우위 등이 작용하였으며, 결국 동독 주민들은 선거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선택하였다. 서독은 동독을 서독의 기본법에 의하여 서독의 법질서 체제에 흡수하는 방식의 평화통일을 달성했던 것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통일의 이념형은 평화통일이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하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남북한관계가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물론 정치, 군사 분야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개선된 후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때, 남북한이 통일의 방식과 절차 등을 협의하여 이루는 이상적인 평화통일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평화통일의 유형에서도 북한이 체제의 변화를 선택한 동독처럼 체제전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한과 하나의 국가가 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현재의 체제가 다소의 혼란스러운 과정을 경험하더라도 결국 남북한간에 군사적 충돌이 없고 북한 내부의 상황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정리되면서 남한과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방식의 통일도 생각할 수 있다. 평화통일을 이와 같은 방식의 통일을 모두 포

합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할 때, 우리는 이상적인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면서도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형 양태에 대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한다.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정치·경제·사회·군사·심리·국제관계 등의 요인으로 분류하는 방법, 환경·능력·의지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국내적 요인·국제적 요인·북한 요인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남한·북한·남북한·국제 분야 등의 요인으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류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집중 워크숍과 수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북한 요인, 남북관계 요인, 국제요인, 그리고 남한 요인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요인은 구성개념(construct), 구성개념을 설명하는 변인(variable), 변인을 측정하는 지표(indicator)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시도된다. 따라서 각 변인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지표를 우선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왜 그러한 지표들이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적실성 있게 설명해줄 수 있는 변인과 그 변인의 측정지표들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설명한다.

첫째, 북한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으로 구성개념을 분류하고, 변인으로서 정치 분야는 체제의 정당성, 정치적 통합성, 체제의 효율성, 정책 방향, 정치적 분권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경제 분야는 대외개방과 대외경제관계의 개선, 경제실태와 주민들의 만족도, 시장요소 도입과 사유제도의 다양화, 경제활동 관련 제반 결정권의 변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회 분야의 변인은 대남 인식, 사회통제, 사회갈등, 사회의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군사 분야는 대남 군사적 위협, 군사태세의 두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남북관계 요인은 남북협력 및 갈등이라는 구성개념 아래, 당국간 관계, 인적 교류, 남북경협, 대북지원 및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 군사적 신뢰구축 수준 등의 변인을 분류하였다.

셋째, 국제 요인으로는 주변국 동향이라는 구성개념 아래,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 일본의 대북정책 방향, 러시아의 대북정책 방향을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남한 요인으로는 구성개념을 통일의지와 통일능력으로 나누었다. 통일의지의 변인은 정치적 의지, 경제적 의지, 사회적 의지, 군사적 의지, 대외적 의지 등으로 분류하였다. 통일 능력은 정치권의 통일방안 합의, 통일비용 부담 능력, 사회보장 및 담세 능력, 북한주민에 대한 포용능력, 한미동맹 등의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개념과 그 개념을 구성하는 변인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 요인, 구성개념, 변인, 지표들을 제안하고 검토하며 수정하기를 반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설명된 영향 요인, 구성개념, 변인과 지표들은 향후 지속적인 비판적 검토와 재평가 등을 통하여 보다 실체를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세련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북한 요인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요인을 통하여 통일을 예측하는 시험적 모형의 개발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그 전제는 북한 요인에 대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북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향후 북한의 변화에 가

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다시 말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영향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북한 요인에 의한 통일의 시기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최고 정치리더십이 북한체제를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 정치리더십에 대한 북한 주민의 믿음이 약화된다면, 북한체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다시 통일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인과적인 가정 아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북한 실태에 관한 조사의 형식을 통하여 응답자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설문은 북한 체제의 변화 추세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점 척도의 평기를 하도록 설계하였다. 응답자가 2002년 이전에 북한을 이탈하였을 경우, 그 응답자는 북한을 이탈한 해까지만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7월 14일, 7월 29일, 9월 5일, 10월 10일 등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제1차 76명, 제2차 60명, 제3차 58명, 제4차 58명 등 총 2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자가 85명, 여자가 162명이며, 성별무응답자는 5명이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 땅을 막 밟은 사람들로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들이다. 이들은 아직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이전의 사람들로서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체제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서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

억하고 응답을 하도록 최대한의 객관적 설문조사가 되도록 유의하였다. 즉 응답자들이 가급적 주관을 담아 평가점수를 기록하지 않도록 매 설문 조사 과정에서 3인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하나하나의 문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가 각 설문에 대하여 10점 척도로 평가하는 기간이 10년 내외가 되므로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급적 긴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기억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였다. 또한 응답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에 달한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가 성별에 의해서 북한에서의 삶의 기억이 편향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남녀 성비의 차이가 크게 본 설문조사의 방향을 편향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부록의 설문조사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0년부터 북한을 이탈한 시기까지(최대 2002년까지)의 북한에서의 삶을 기억하여 응답하도록 매우 자세하게 구성되었다. 이는 우선 북한체제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즉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면접이나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에서의 삶의 기억을 통해 북한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설문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할 것으로 간주되기 쉬우며, 과거에 대한 기억 또한 부정확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완전히 개방된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설문조사 방법도 때로는 왜곡된 결과를 산출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설문조사 방법조차도 정성적이고 추정적인 방식의 북한변화추세를 분

석하는 방법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지향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위하여 앞으로 그와 같은 방법론적인 문제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II.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념적 설명

1. 북한 요인

가. 정치

통일과정으로 이르는 길은 평화통일을 상정할 경우, 북한체제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즉 북한체제의 지속성 또는 내구력은 평화통일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분석·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으로 체제의 변화를 위기상황의 대두와 연결하여 연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위아르다(H. J. Wiarda)는 사회주의 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이데올로기의 위기, 제도의 위기, 사회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기의 위기, 국제적 위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⁶ 하버마스(J. Habermas)는 현대자본주의 사회를 경제체제, 정치체제, 사회문화체제 등 세 개의 하위체제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체제로 상정하고, 만약 각 하위체제가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위기가 조성되면 자본주의사회 전체가 위기국면을 맞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치체제 위기의 선행지표로 정당성 위기, 경제 위기, 합리성 위기, 동

6 Howard J. Wiarda, "The Future of Marxist-Leninist Regime: Cuba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Durability and Direction of the Four Remaining Socialist Countries: China, Vietnam, Cuba and North Korea*, 한국국제정치학회와 민족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1994.5.27~28).

기유발의 위기를 제시하였다.⁷

북한정치체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의 연구는 체제 안정성 변인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변인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⁸ 립셋은 정치체제의 안정성(stability)이 그 정치체제의 효과성(effectiveness) 및 정당성(legitimacy)의 보완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효과성은 ‘정부가 고유기능의 수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정의되며, 대기업 또는 군부 같은 세력집단들 및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적(역할)기능을 그 체제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뜻하였다. 정당성은 ‘기존 정치체제가 그 사회를 위해 가장 적절한 제도라는 신념을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정당성은 정치체제의 창출과 통치세력의 등장, 그리고 통치방식이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방법과 절차에 입각했는지의 여부와 정책효과가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그리고 그는 효과성과 정당성이 다같이 높은 체제는 안정적인 반면에, 다같이 낮은 경우는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효과성과 정당성의 위기는 체제의 변화

7 Jurgen Habermas, *Legitimation Crisis* (Boston: Bacon Press, 1973), pp. 2-4.

8 Seymour Martin Lipset, *Political Ma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3), pp. 64-86.

9 립셋은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성의 위기를 촉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①정치체제의 창출과 집권과정의 공정한 경쟁원칙을 무시하고 무력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②통치권의 행사가 민주성과 도덕성(공익성)을 무시하고 자의성을 띄게 될 경우, ③지배엘리트, 특히 기술관료의 정책효율성이 저조할 경우, ④정치체제의 권력구조가 심각하게 불균형상태를

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같은 립셋의 분석변인은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정치체제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이다. 따라서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립셋의 분석변인을 기계적으로 원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립셋의 분석변인을 변형·발전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정도 유용한 분석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방향 및 통일 전망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서 분석하였다. 즉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구성하는 변인으로서 체제의 정당성, 정치적 통합성, 체제의 효율성, 정책방향, 정치적 분권화 등 크게 5가지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의 정도와 방향은 하위 지표로 측정될 수 있다.

(1) 체제의 정당성

정당성(legitimacy)은 그 정권의 등장이 기존 정치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 요인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 또는 일체감을 형성하는 대의명분 요인이다. 북한의 경우, 정당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수령인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 조직적 차원에서 조선로동당에 대한 지지도, 체제적 차원에서 우리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지도 여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이루고 있을 경우 등이다. S. M Lipset, *Political Man*, p. 80.

1)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

구소련, 중국,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전환과정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핵심적 변인이었다.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에서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은 북한 변화방향과 통일 상황 전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변인으로 지적되었다.

김정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도 변화 정도는 김정일이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수령·당·인민대중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강조하는 지도부로서는 경제난과 외교·안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지지가 절대로 중요하다. 김정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도가 떨어질 경우 한국주도의 통일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지지도가 높아질 경우 남북공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조선로동당에 대한 지지도

조선로동당에 대한 지지도는 정권(regime)의 변화여부와 연결된 지표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의 개인적 수준 변화(사망 또는 몰락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조선로동당에 대한 지지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심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속할 것이다.

3)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지지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지지도는 체제(system)의 변화여부와 연계된

지표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몰락과 조선로동당의 위상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북한주민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확신이 지속될 경우 사회주의체제는 견지될 것이다. 다만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 해결을 위해 개혁 지향적 사회주의체제로의 변화를 북한주민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경향성이 큰바, 개혁 지향적 사회주의체제에서도 북한의 경제난은 근본적으로 해결 될 가능성이 낮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지도는 국가(state)의 붕괴여부에 연계된 지표이다. 비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조선로동당의 위상이 악화되며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낮아질지라도, 북한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이 높을 경우, 한국주도의 흡수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2) 정치적 통합성

모든 사회주의국가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단일 지배정당인 공산당에 의해 배타적인 상황에서 통치되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위계제의 각 수준은 그것의 바로 위에 있는 수준의 결정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¹⁰와 당내에서 반대파를

10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라는 두 개념의 결합어로서,

조직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파벌금지’의 원칙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로 규정되며, 이는 당권이 모든 여타 정치기구의 역할과 권한에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당의 권력독점과 지도적 역할이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다.

북한도 초기에는 스탈린의 당이론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여 당·국가체제를 형성하였다.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은 국가권력의 원천과 중핵이 되고, 모든 국가적·사회적 조직의 지도적 핵심이 되었다. 북한헌법의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원칙’에 따라 상급당 결정에 대해서 하급당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은 절대적 복종과 그 지도 및 감독을 전적으로 받게 되었다.¹¹

그러나 1967년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수령의 유일지도체제가 형성되면서 북한은 북한식의 특이한 수령제 사회주의체제(유일체제)로 변형되었다. 북한은 당을 “수령, 즉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김

민주주의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인민대중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을 말하고, 중앙집권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직접 통제하고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하급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①최고 국가권력기관 및 지방권력기관은 인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②모든 국가기관은 이러한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구성되며,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사업을 보고하며, ③국가권력은 궁극적으로 최고 국가권력기관에 집중되고 상급기관의 결정은 하급기관을 구속하며, ④각 기관 내부에서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동문제연구소 편, 『세계 공산권 총람』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2), p. 619. 요컨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는 본래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활발한 공개 토론에 따른 당내 민주주의와 하의상달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보장되게 되어있다.

11 북한헌법(1972년 및 1992년) 제 11조 참조

일성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¹²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¹³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1972년 12월 29일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국가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수령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기관체계를 헌법적으로 확립하였다.¹⁴

이와 같은 유일체제 형성은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요소를 말살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체제 경직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법과 제도에 의한 법치가 아니라 무오류성이 부여된 신격화된 수령과 지도자에 의한 자의적 지배 즉 인치 또는 신치(神治)가 가능케 됨으로써 숙청과 공포정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과

12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 100-101.

13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며 수령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질서를 전당과 온 사회에 확립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영도체계이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편, 『영도체계』 (서울: 지평, 1989), p. 80. 한편 주체사상에 의하면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를 통하여 실현되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는 혁명과 건설 전반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지도체계이며 영도체계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는 수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기관 그리고 근로단체들로 이루어진다.

14 북한은 노동계급의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모든 국가기관들이 조직되고 운영되며 그 활동이 실현되도록 규정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주장한다.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7), p. 126.

건설과정에서 수령과 당의 무오류성 보장으로 인해 국가기관은 단지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해주는 인전대(transmission belt)로 격하되었다.¹⁵

한편 사회주의국가 정책결정과정은 합의모델(consensus models), 갈등 모델(conflict models), 절충모델(combined consensus/conflict models)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합의모델은 정책 목표나 방향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결정적인 불일치가 없는 것으로 상정한다. 당 총비서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제모델(the autocratic model), 정치국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과두제 모델(the oligarchic model)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갈등모델은 정책을 여러 집단 또는 파벌들 간 경쟁의 산물로 간주한다. 정책을 경쟁파벌 제거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파벌모델(the factional model), 이상주의와 실용주의의 대립 산물로 설명하는 좌우 갈등모델(the left/right conflict model), 집단적 이해관계의 타협산물로 간주하는 다원주의모델(the pluralist model), 당료보다는 군 간부와 중공업 담당 관료연합체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군산복합체모델(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model)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절충모델은 합의 및 갈등 모델을 조화시켜 설명력을 높였다. 고위 정책결정 수준에서는 합의모델이, 하위정책결정 수준에서는 갈등모델이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주장하는 분석수준별 접근 모델(level of analysis approach), 정책입안 시점에서는 갈등모델이 유효하나, 정책결정 및 집행

15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당과 행정과의 관계를 ‘배에서 키를 잡은 사람과 노를 짓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다’고 비유함으로써, 국가기구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집행자 즉 도구로서 규정하였다.

시점에서는 합의모델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주장하는 시간별 접근 모델 (sequential or temporal approach), 정책결정자의 지도력과 쟁점영역 그리고 위기상황에 따라 합의모델과 갈등모델 연속선상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연속체 모델 (the continuum model) 등이 여기에 속한다.

1) 김정일과 군부간의 갈등 정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었다. 당정치국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과두제모델(집체적 협의론), 온건 관료와 강경 당료·군부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좌 우 갈등모델(강온파 노선투쟁 또는 정책대립론), 북한 정치가 표면상 김정일 독재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체는 지도부 구성원간 다양한 내부갈등의 타협 산물로 간주하는 조직동일시 모델, 유일지도체제와 당규약, 그리고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 북한사회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체적 협의나 강온파의 대립이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하는 강화된 전제모델(유일체제론) 등이다.¹⁶

한편 북한의 권력구조는 외형상 노동당을 정점으로 정권기관과 군이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제 권력은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당과의 관계에 있어, 외형상 형식적·공식적인 부분은 실무자에게 맡기고 실질적·비공식적·공작적·무력적인 것은 직접 지도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군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

16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1997), pp. 32-35.

과 ‘유일자배체제 지속설’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 있어서는 김정일 영도 하에 당중심의 군 중시 정책 결정구조가 이뤄지고 있으나, 당면 경제난과 외교·안보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일과 군부의 갈등이 현재는 낮으나, 향후 심화될 경우 이는 내전과 더불어 한반도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내전이 심화될 경우, 한국주도의 흡수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김정일과 군부의 갈등 정도가 낮을 경우, 흡수통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을 전망된다.

2) 권력엘리트 갈등(온건 vs 강경대립) 정도

경제난과 외교·안보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김정일 중심의 유일체제가 확실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고, 제2차 북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므로써 미국의 대북 경제·외교적 제재가 강화될 경우, 권력엘리트 내에서 정책노선을 중심으로 마찰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경제중심의 온건 관료와 안보중심의 강경 당료·군부 대립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같은 강·온과 간 노선투쟁 또는 정책대립의 심화는 한국주도의 통일 또는 합의통일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3) 체제의 효율성

모든 공산주의(사회주의)국가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공식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있다. 이 같은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국가의 지배자들이 권

위를 행사하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정치에 기본이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적 특성은 강한 이념지향성을 띠게 된다. 또한 공식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체제 성립과정을 합리화할 뿐 아니라, 체제수립 이후 체제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당화 논리로도 기능하게 된다.

북한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통치이데올로기로 하여 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1인자배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점차 변형하였다. 북한은 1950년대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4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공산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을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2년에 개정된 헌법 제 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¹⁷고 규정함으로써, 주체사상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천명하고 주체사상의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의 탈피와 독자성을 선언하였다.

1) 주체사상 이데올로기의 퇴화 정도

주체사상의 내면화 정도와 일상생활에서 실천성 정도는 북한체제의 이념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내면화정도가 약화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정도가 낮아질 경우, 이는 김정일 정권 및 ‘우리식 사회주의’

17 통일원 「북한개요 1992」 (서울: 통일원, 1992), p. 517.

에 대한 북한주민의 헌신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퇴화가 심화될수록, 한국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북한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 태도가 완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의통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당조직의 효율성 정도

당조직의 효율성 정도는 당면 경제난뿐 아니라 기타 과제의 해결과 연계되어 있고, 최고지도자와 당의 노선 및 지침이 하위조직에 잘 전달되는 메커니즘의 작동여부를 의미한다. 북한의 당조직을 비롯하여 관료기구들은 비록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⁸ 당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경우, 흡수통일 가능성은 낮아지고, 합의통일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책 방향

1) 지도자의 개혁·개방 의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개방의지는 북한의 개방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¹⁹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강화

18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77-82.

19 박영호 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41-42.

게 추진할 경우, 흡수통일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확신이 지속될 경우 합의통일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지도자의 통일의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의지는 현 단계 남북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공산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경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나, 지나친 통일의지는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낸 이후 적화통일을 포기할 경우, 비록 그 정도는 현 단계에 높지 않지만 합의통일이 이룩될 가능성도 있다.

(5) 정치적 분권화

수령제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면, 이는 체제변화의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당 중심의 정치체제 위에 수령제를 첨가한 수령독재적 당중심의 권력중앙집중체제라 하겠다. 이러한 북한에서 정치적 분권화는 북한 변화에 있어 중요한 정치적 요인이 된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수령제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1) 경제적 측면의 지방분권 정도

최근 북한이 선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개성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리고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향후 북한은 자력갱생의 폐쇄적 중앙집중체제에서 벗어나 개방체제와 지방분권사회로 나갈 가능성이 제한적이거나 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될 경우, 남한주도의 흡수통일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합의통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2) 정치적 측면의 지방분권 정도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분권화가 확대되기는 현 수령제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이 강화될 경우, 이는 장차 당 중심의 중앙정치체제 약화를 의미할 수 있고, 결국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당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합의통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겠다.

나. 경제

북한의 경제체제가 체제전환 과정을 거쳐 점차 시장경제체제로 이행되면, 남북한 경제제도 사이의 이질성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통합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통합과정이 단축된다는 것은 통일 관련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제전환이 진행된다면 남북한 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은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라빈(M Lavigne)은 개혁의 성격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인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one-party), 단일한 국가소유제(one-property), 중앙에 집중된 단일계획(one-plan) 체제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⁰ 여기에서 라빈은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개혁 작업이 공산당의 통제력 완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분권화, 국가소유의 독점 완화를 통한 소유제도의 다양화, 시장적 요소의 도입을 통한 정부의 계획과 시장의 조화라는 3가지 형태로 추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향후 개혁·개방정책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결정권의 분권화, 소유제도의 다양화, 시장요소의 도입 및 대외개방 등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결정권의 분권화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앙명령계획경제체제의 이완을 통한 지방정부와 기업소·공장으로의 자율권 행사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영역을 정치영역과 분리함으로써 경제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 부문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다. 소유제도의 다양화는 사적소유권 영역의 확대와 함께 사회적 공동소유권의 개념을 완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농업부문에서 책임생산제를 도입하는 것도 소유제도를 다양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장요소의 도입은 시장경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과 시장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경제제도에 시장적 요소를 가미하거나 시장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식과 농민시장(종합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공식화 제도

20 Marie Lavign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9), pp. 29-43.

회함으로써 확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1) 대외개방과 대외경제관계의 개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대외개방은 체제전환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외개방의 진전은 국제경제질서로의 편입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해서 국내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서 대외경제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197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개선 노력은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국제경제기구에의 참여, 무역의 자유화·분권화 등을 통한 무역구조의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표 II-1>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부 문	지 표	내용 및 수준
대외경제관계 개선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1979. '중외합자경영기업법'(직접투자 허용) ·1980. 4대 경제특구 지정 ·1984. 14개 연해지역 개방 ·1985. 4개 연해지역 개방 확대 ·1992. 주식투자 허용
	국제경제기구 참여	·1980. IMF 및 세계은행 대표권 획득 ·1986. ADB 가입
	무역의 자유화·분권화	·1979. 심천 주해에 수출특구 ·1980. 지방정부 및 대형기업에 무역권 부여 ·1984. 무역전문기업 인정 ·1992. 수입관세를 인하

북한의 경우에도 대외경제관계의 개선 실적은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국제경제기구에의 참여, 무역의 자유화·분권화 등을 통한 무역구조의 개선 정도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 당면한 경제난을 고려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역시 북한의 대외의존도를 증대시켜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경제의 침체가 극심할 경우 외부에서의 식량 등의 지원은 급격한 붕괴나 급작스러운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북한의 외환 및 외채상황도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2) 경제실태와 주민들의 만족도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경제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경제의 내구력이 증대되어서 점진적인 통합의 가능성이 확대된다. 국가경제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정치·경제적 안정성, 거시경제지수, 정부의 재정능력, 외환상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북한의 경제성고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국민총생산량과 재정규모, 재정수지 등을 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주요 생산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표들은 그 통계치나 추정치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생산량과 재정규모의 증가는 경제의 내구력을 증대시키고, 점진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의미로 정부의 재정상태의 개선도 경제의 내구력과 성장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식량생산량과 석유와 같은 전략물자의 대외의존도 등도 북한의 경제상황을 가늠하는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량생산량은 식량난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식량의 증산은 급격한 형태의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것이며, 전략물자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급격한 형태의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제생활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만족도는 경제의 내구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를 제공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변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식량과 생필품의 배급 및 공급 상황과 주거 여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악화되면 사회의 일탈현상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경우 내부불만의 폭발로 이어지고 체제의 붕괴나 급격한 흡수통일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 11-2> Euromoney의 국가신용등급 주요 평가항목과 내용

평가요소	가중치	내 용
경제성과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 전망 ○ 통화안정성 ○ 경상수지 ○ 재정수지 ○ 실업 ○ 경제구조의 균형성
정치적 위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대가, 외채상환 및 배당 등에 대한 지급불능 위험정도
외채지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채/GNP, ○ 경상수지/GNP, ○ 외채상환/수출(D.S.R.)

(3) 시장요소의 도입과 사유제도의 다양화

시장요소의 도입과 사유제도의 다양화는 북한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점진적인 통일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력 약화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흡수능력의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점진적인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요소의 도입은 시장의 제도화, 기업들의 생산활동에서의 자율권 강화, 일반주민들의 경제활동에서의 자유 증대 등의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며, 개인들과 집단의 소유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사유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1978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서 시장적 요소를 도입해 왔으며,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²¹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같은 해 제14차당 대회에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의 적극적인 도입과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급속히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고, 아울러 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는 법체계 정비에 착수하여, 1993년 3월 29일에 열린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에 규정하기에 이른다.

21 1992년 초 등소평이 무한, 상해 등을 순회하면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방간부들을 격려함으로써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표 II-3> 1970-80년대 중국의 개혁 정책

부 문	지 표	내용 및 수준
소유제도의 다양화	농업의 책임생산제	·1978-9. '정액포공(20-30호 단위)'/ '연산도조(10명 단위)' ·1980년대 '포간도호(개별농가 단위)' ·1982. 위의 책임생산제 방식 공식 인정 ·1984. 농지의 임차기간 확대
	사적경제활동 허용	·1978-80. 농업의 '전업호', '중점호' 도입 ·1979. 사대기업 발전(1984. 향진기업으로 개칭) ·1984. 사영기업 공식 인정
	사회·협동단체 의 영리활동	·1978. 집체소유제 및 경제연합체 소유 인정 ·1984. 주식제도 도입
시장요소의 도입	가격체제 개혁	·1979. 농산물 가격 조정 ·1984. 생산제 가격 조정 ·1985. 농산물 수매제도 부분 시행 ·1986. 공산품 가격 개방
	투자결정의 효율성 제고	·1979. '이윤유보제' 도입 ·1980년대 초 '이윤청부제' 도입 ·1983. '이개세제' 도입
	금융기능의 확대	·1979-83. 4개 민간은행 설립(초보적 자금시장 운용) ·1983. '중앙은행 기능 수행에 관한 결정' ·1990. 주식거래소 설치(심천, 상해)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과는 개혁 초기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제도의 다양화와 시장요소를 도입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중국과는 달리 공업화의 진전으로 농업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업부문이 중국처럼 경제개혁의 출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같은 이유로 인해서 북한의 시장요소의 도입 역시 중국의 경험과는 다른 경로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경제활동 관련 제반 결정권의 분권화

체제전환국들이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 및 단위 기업소들에게 분권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 경제부서가 기존에 당에서 행사하던 계획·결정·관리감독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며,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결정권이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되는가하면, 기업의 전문경영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개혁과정에서 분권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내용은 내각의 경제부처가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및 기업소와 공장의 경영책임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와 범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4> 체제전환국들의 분권화 초기정책

국가	주요 부문	내용 및 수준
중 국	경제부서의 역할 증대	·1979. 인민공사 개혁(1982. 인민공사의 해체) ·1979. '수출입관리위원회'와 '외환관리위원회' 설립 ·1982. '대외경제무역부'로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1984. 지방정부에 무역권 부여 ·1985. 선별적인 책임제 도입
	경영책임자 자율성 증대	·1978. '국영기업 자주권 확대에 관한 규정' ·1984. '노동계약제' 도입 ·1992. 국영기업에 근로자 경영권 확대
구 소 련	경제부서의 역할 확대	·1973. '생산합동'과 '공업합동' 창설 ·1983. 공업부문의 개혁(공업관련 '省'들의 실권을 제한하면서 행 정과 기업들의 자립성을 강화) ·1985~89. 관리기구의 개혁
	경영책임자의 자율성 증대	·1985. 신경영방식 도입(완전한 독립채산제, 자기금융조달 방식 으로의 이행) ·1987. '소연방 국유기업법' 도입(세부적인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개별기업들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
베 트 남	경제부서의 역할 확대	·1989.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 설치
	지방정부의 권한 증대	·1977. 省, 郡, 邑 단위에서 인민회의 구성을 위한 지방 선거 실시 ·1999. 3개의 중앙직할시와 53개 省으로 행정구역 개편
	경영책임자의 자율성 증대	·1989. '각의결정 195호'(국유기업 경영자주권 대폭 확대)

다. 사회

(1) 대남인식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다. 현재 북한의 간부들과 일반주민들은 남한에 대하여 적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감의 뿌리는 한국전쟁에 있다. 해방 직후 김일성은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괴뢰’ 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시각은 이후 북한의 대남 인식의 기초가 되었다. 김정일 시대인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점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한을 식민지로 보는 시각 때문에 북한은 일제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항일무장독립투쟁을 한 것처럼 ‘미제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미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며 ‘선군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이로부터 출발한다. ‘민족론’ 및 ‘민족해방론’을 주장하는 이유도 유사하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을 남한과 미국이 동맹하여 북한을 선제공격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남한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북한의 인명과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휴전 이후에도 남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 대하여 적대정책을 계속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군사도발을 계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령, 서해교전 사건 등은 북한이 도발하여 발생한 사건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도발한 것으로 교육받고 있고, 한 미의 팀스피리트훈련과 같은 합동훈련을 북한주민들은 북침을 위한 훈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하

여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남한정권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파쑸’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파쑸타도’와 ‘민주정권 수립’을 주장한다. 민주정권 수립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파쑸론’은 남한 최고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대남 시각은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세뇌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최근 남한에 대한 태도는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개인이나 기업의 자력갱생원칙이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 일본 및 남한 물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외제에 대한 거부반응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북한 내 소비재의 90%정도는 중국산이고 일본, 남한산도 상당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대북 지원식량이나 생필품이 주민들에게 직접 배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 군인이나 관료들이 배당된 식량을 ‘암시장’으로 빼돌림으로써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을 알게 된다.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남 적개심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다만 아직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판사판식’의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로 불신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한, 통일은커녕 교류와 협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도 어렵다. 남북간의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은 한, 합의통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서로 간에 적대감이 높으면 조화로운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흡수형의 통일을 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

이 가지고 있는 대남인식의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남 적대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합의형의 통일도 어려워지며, 흡수형의 통일도 어려워진다.

(2) 사회통제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였지만 북한만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엄격한 사회통제 체제이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도 사회통제를 하였으나 북한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북한의 사회통제는 비밀감시제도, 가족연좌제 등의 특별한 사회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당, 보위부, 안전부가 일반주민들을 직장, 학교 등의 일상생활에서 감시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비밀감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상생활형의 감시제도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친한 친구 간에도 속마음을 터놓지 못할 정도로 사회통제에 대한 공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가장 비인도적인 사회통제 중의 하나는 가족연좌제이다. 가족 중의 한 명이 정치범죄를 저지르면 일가족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집단 수용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체제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몸뿐이라면 수없이 저항행위를 했겠지만 가족에게 미칠 처벌이 두려워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연좌제는 개인의 불만표출과 집단행동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다. 범법자 당사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같이 처벌하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적용한다. 특히 정치범에게는 예외가 없다.

자살도 연좌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북한에서는 자살행위를 사회에 대

한 불만 표출로 간주하여 반역죄로 취급한다. 자살하면 가족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살행위가 많지 않다. 굶어 죽으면서도 굶어 죽었다는 말을 못한다고 한다. 연좌제로 그 가족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또 하나의 억압적인 사회통제제도는 암행 감시망의 운용이다. 사회안전성, 국가안전보위부, 당조직에서 정보원을 각 직장, 각 조직에 운용하고 있다. 정보원은 출신성분이 좋은 일반주민 중에서 비밀리에 선발, 임무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주민동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누가 정보원인지 아무도 모르는 셈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명 중 1명, 6명 중 1명 또는 10명 중 1명이 정보원이라고 한다. 즉, 차이는 있지만 주위사람을 항상 정보원으로 가정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에는 분명하다. 북한주민들은 “자기 등짝도 못 믿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고 한다. 방에 혼자 앉아서도 김정일에 대한 불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감시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부모들이 외출하는 자식들에게 자주 타이르는 말의 하나는 말조심하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주민들이 사회통제를 의식할수록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변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사회통제가 엄할수록 북한체제의 원형이 그대로 온존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형의 통일이든, 흡수형의 통일이든 어려워지는 것이다.

1)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정도

체제를 유지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은 체제의 정당성과 공안기구를 통한 주민통제이다. 독재체제가 체제의 정당성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는 것은 공안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어느 체제이든 공안기

구는 체제유지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공안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 한 체제는 유지된다. 스카치폴(Theoda Skocpol)은 혁명은 공통적으로 국가 재원이 고갈되어 공안기구의 작동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²² 국가가 공안기구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면 공안기구의 기능이 효율성을 잃게 되고 결국은 마비되고 만다는 것이다.

주민 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물리적 수단은 당과 인민군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당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도력을 옹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약 320만 당원들은 주민들의 통제와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을 동원하는 핵심기구이다. 또한 대내치안은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일반적인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위부는 반김정일 등 반혁명 세력 등 정치범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띠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른 사회 불안으로 내부 치안에서도 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건설에 군이 전위대로서 영도적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김정일의 영도체제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들 억압기구들은 비밀감시체제를 동원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물리적 수단의 동원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에서는 주민 통제를 위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국가가 독점하고 주민들의 사회, 정치 및 사생활의 영역까지 그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

22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고 있고, 그 처벌도 정당한 절차보다는 정치적 편의에 의한 비인도적인 처벌이 다반사로 실행되고 있다. 공안기구의 통제가 높아질수록 북한주민들의 북한체제에 대한 고착은 지속되는 것이다.

2) 탈북자 규모

많은 탈북자의 발생은 북한이 경제난에 직면하게 된 이후의 현상으로서, 북한체제의 위기 상황의 부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의 증가는 북한이 와해되고 있는 징후의 하나이다. 탈북자의 발생은 북한 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공안기구들의 작동이 이완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탈북자 중에는 중국에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여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탈북할 때와 되돌아갈 때 국경 경비원을 피해서 몰래 통과하는 경우와 경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든 경비원들의 사상과 태도가 이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탈북자수는 1990년대 중반 최대 30만 명 규모로 절정에 달했으나 단속 강화와 북한의 식량난 완화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재중 탈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한국으로의 입국자가 늘어나는 것은 북한 특무와 중국 공안의 단속 강화에 기인한다. 한편, 탈북자의 동기과 행태에서 질적, 양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탈북 동기의 변화와 관련, 과거 식량 취득을 위한 단순 왕래형에서 체제비판적이고 망명을 추구하는 정치적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탈북행태의 변화와 관련, 단순 탈북이 아닌 남한으로의 귀순이나 제3국으로 망명을 위한 기획 및 조직화 양상을 띠고 있다.

2001년 6월 일가족 7명이 베이징의 UNHCR사무소에 진입하여 남한

행을 요구한 이후 국제기구나 외교공관을 통하여 남한행 또는 제3국행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탈북현상은 탈북자들이 국제 민간단체나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조직화, 기획화, 상업화 되고 있다.

유엔 인권레짐과 국제민간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중국 및 북한의 인권문제로서 국제화되고 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기구로는 최초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4년 회의에서도 북한인권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어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내 탈북자문제도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탈북자 규모가 클수록 북한의 사회통제 체제가 이완된 것을 의미하며, 사회통제가 이완될수록 체제의 유지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주민들의 사회이동 정도

북한체제는 사회이동을 최소화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특징도 있다. 사회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분석된다. 첫째는 사회이동은 정보 소통을 확대하기 때문에 사회통제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사회이동을 억제한다. 둘째는 북한사회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군중노선에 입각한 동원의 체제이다. 그래서 개인이 역내를 벗어나면 군중동원에 차질이 발생하여 정치적 경제적 동원에 차질이 발생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군(郡)경계를 넘을 때 반드시 여행증을 발부반아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여행증은 사회안전부에서 몇 차례의 절차를 거쳐서 발급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90년대 이후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빈

배급표를 여행증 삼아서 역내를 이탈하여 이동을 하기도 한다. 여행증 단속에서 발각되더라도 빈 배급표를 보여주면서 배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친척집에 간다는 핑계를 댈다. 단속을 담당하는 공안원도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여 굶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속을 할 수 없다. 사회적 이완 현상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3) 사회갈등

어느 사회나 여러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의 갈등은 곧 사회갈등이다. 그래서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편재적이다. 다렌도르프(Ralph Darendorf)는 사회갈등은 사회발전에 기능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갈등을 잘 관리하면 사회구조의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도 여러 사회집단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갈등을 표출할 수 없다. 사회갈등은 곧 불만의 표출로 인식되고, 불만은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는 사회적 불만은 곧 정치범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사회적 불만에 대한 기존의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 갈등 정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의 하나는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간의 갈

등, 즉 일반주민과 간부층 간의 갈등이다. 경제난 속에서 회귀 재회는 간부들이 선점하고 일반주민들에게는 배급될 것이 없다. 일반주민들은 간부들을 공적 권력을 활용하여 자기 개인의 이익 챙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이 흔히들 하는 이야기의 하나가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빼먹고, 안전부는 안전하게 빼먹고, 당간부는 당당하게 빼먹는다”는 말이 있다. 군대에서는 “군단에서는 군데군데 빼먹고, 사단에서는 살금살금 빼먹고, 연대에서는 연대적으로 빼먹고, 대대에서는 대대적으로 빼먹고, 중대에서는 중요한 것만 빼먹고, 병사들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갈등은 생존투쟁의 갈등이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등을 의미한다. 일반주민들은 간부들이 부패하고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망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인식 때문에 간부들은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일반주민들은 남한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하여 총을 쏘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간부와 주민간의 생존경쟁이 심화된 결과 두 계급간의 적대의식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배 계급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희소가치를 독점함에 따라 일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10% 정도는 권력 있고 잘 사는 계층, 40%는 장사 밑수해서 그럭저럭 먹고사는 계층, 나머지 절반은 매우 어렵게 사는 계층이다. 북한 주민들은 계층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간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본다. 주민의 불만은 주로 김정일 이하의 하위 간부들에게 지향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북한에서 조직적인 저항은 일어나기 힘들지만 개인적 차원의 복수는 이미 곳곳에서 자주 일어난다. 안전일꾼, 보위일꾼, 당일꾼들에 대하여 테러를 가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간부들은 밤이 되면 밖에 다니는 일이 없다고 한다. 탄광의 경우 중앙당에서 간부들이 선전교양 나오면 돌아가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 당 선전사업은 비공개적으로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핵심 일꾼만 모아 놓고 강연하는 데 그친다고 한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반감 때문에 농촌위원회 부위원장들이 농촌 현지에 나가지가 무섭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층은 일반 주민들의 이러한 불만과 잠재적 폭발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폐쇄주의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가능성은 일부의 복잡 군중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인민 대중에게 동시에 기대된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층은 자신들의 배타적 특권 행사와 일반 주민들에 대한 억압정책이 야기한 사회갈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 대중들의 반발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인식에는 변화가 일고 있다. 1990년대 충격적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비난의 화살이 중간층 간부에서 상층부로 올라가고 있다. 북한사람들은 김정일을 욕하고 싶지만 시어머니 역정에 개 옆구리 찬다고, 김정일을 욕하면 문제가 생기므로 중간 간부들을 욕한다고 한다. 한 번이라도 김정일을 의심하면 자기 신변에 위협이 생기므로 말을 못한다. 그런데 국경지대에서는 김정일을 내놓고 욕하고 있다고 한다.

2) 지식인층의 개혁지향적 사회의식 정도

사회 문제를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사회에 전파하며 저항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데 있어서 지식인층이 전위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식인층은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한 분석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종사하는 업무도 이데올로기를 계획적으로 창조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체제에 동의할 경우 체제의 전위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비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개혁·개방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저항적 행동에 옮긴 계층은 지식인층이다. 이들은 체제를 이탈하여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체제의 도구를 활용하여 저항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국가조직에 있으면서 조직의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조직과 일반 사회에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북한의 경우 지식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어느 계층보다 엄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식인 중에서 소설이나 영화를 만드는 작가들이 검열을 거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의 작품들을 내놓고 있다. 가령 ‘임꺽정’ 제목의 영화는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놈의 갈등을 고발하기 위하여 만든 영화이지만, 그 영화를 보면 현재 북한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특히 동 영화의 주제는 젊은이들이 매우 깊은 감동으로 공감하여 삼시간에 북한 전역에 전파되었다. 북한의 지식인들이 개혁지향적 의식을 가질수록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곧 남북한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사회의식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통제하는 데 있다. 인간개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유일사상’이라는 우상숭배 구도 속에 구속시키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의식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하에 외부와의 교역관계를 차단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안정을 위하여 경제를 불모로 삼아왔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붕괴가 왔다. 그런 점에서 북한 당국에게 북한 주민의 사회의식의 향방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정치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 배경을 사상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폐쇄주의를 더욱 엄격히 하고 사상교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곤 하였다. 북한에서 사상의 순결성이란 북한 당국이 제시한 사상의 내용만 건전한 사상이며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는 모두 불순한 ‘황색바람’이라고 간주하고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통제란 곧 정보통제이다.

북한에서 중요한 행위규범인 집단주의는 배급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에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배급이 중단되고 개인들이 각자 능력대로 수단대로 장사, 밀수, 부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인주의는 생존의 원리가 되었다. 실제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핵심명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기수에 와 닿았던 것이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이제는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북한주민들에게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공식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 동

기에 대하여 주체사상이 말하고 있는 자기 운명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결행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집단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침식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러한 시대적 대세와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 외부정보 유입 수준

북한이 외부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1955년 주체사상을 만든 이래 가장 중요한 정치의 과제중의 하나이다. 외부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공안당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외부정보는 북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통제기구가 이완되어 발생한 틈새로 들어오거나 외부의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외부정보가 들어오면 북한 당국의 유일사상체제가 동요하게 된다. 북한에서 유일사상체제란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흔히 유일사상이란 김일성주의를 의미하는데, 김일성주의란 주체사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김일성의 항일혁명사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들은 북한주민들에게 별 실용적인 의미가 없다. 오늘날 유일사상이란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 다름 아님 유일사상인 셈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들은 북한의 너무나 낙후하고 주민들의 이사상태를 면할 수 없는 실상에 비해본다면 남한, 일본, 중국 등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큰 차이를 노정시켜 주는 정보들이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행한 업적이 무엇인지를 회의하게 하는 정보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외부정보가 많이 유입될수록 북한 당국이 원래의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지는 조건에 있는 셈이다.

2) 자유화 및 민주주의 의식 확산 정도

지난 5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이다. 정부 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유롭게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처럼 개혁과 개방을 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개혁·개방이란 다름 아닌 자유롭게 장사를 하고 자유롭게 중국을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의 핵심적 명제중의 하나인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명제가 북한주민들에게는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데 지금까지 수령이 주인노릇을 하였으며 간부들이 주인노릇을 하였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의 사상은 좋으나 현실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체사상이 전체주의 북한의 지배이념이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북한주민들이 회구하는 것이 자유화 및 민주주의이며, 현재의 체제는 그것을 금기시하고 있다는 것이 체제와 주민간의 갈등적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자유화 및 민주주의 의식이 확산될수록 남북한 통일의 기반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 군사요인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던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김정일도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력에 크게 의존해 오고 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군대를 통한 체제유지의 특성을 반영한다. 북한 군대는 그동안 당의 장악과 적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북한은 정치·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테러 및 군비증강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옴으로써 대남 군사적 공세전략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향후 남북한 통일실현 과정에서는 북한군대의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김정일이 권력기반을 군허나감에 따라 북한군대 역시 정치적 조직에서 군대 본연의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변화 과정이 심화됨에 따라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통일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군사적 부문의 척도로서 우선 북한 군대의 정치적 속성이 군 전문적 조직으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군대가 대남적화전략의 수단에서 단순히 국가차원의 방위적 수단으로 변해 가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요소들이 통일변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대남 군사적 위협 활동과 군사태세이다.

(1) 대남 군사적 위협 수준

북한은 대남 군사적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대남 군사적 위협 활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가 심화되고 변화된 북한의 체제가 이러한 대남 군사적 적화전략이 비현실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갈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점차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최소한 평화공존 내지는 평화적 통일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군사 활동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실제 크고 작은 대남 군사적 모험, 즉 저강도 분쟁의 빈도에 대한 예측으로 통일 과정 단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안정된 평화적 분단관리 차원에서 남북한이 맺게 되는 여러 형태의 군사협정 준수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통일과정 단계 평가에 주요한 지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상태 변화 추세를 평가를 중심으로 할 경우 남북한의 통일유형은 합의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대남 군사적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의도를 강화해 나갈 경우 북한군대의 정치적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남 군사적 테러 확대 등의 군사적 위협 활동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남북한 통일 실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1) 군대의 의식 변화

경제 개혁·개방 정책과 관련하여 군부내의 노·장·청간의 의견차이가 등장할 수 있으며 노장층의 군관들은 비교적 경제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젊은 군관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지지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과정에서 젊은 군관들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군대내의 당의 역할을 축소 또는 폐지시키는

데 앞장서온 사례는 북한의 경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젊은 군관들은 점차적으로 당의 군대와 같은 정치성 추구보다는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과, 군 현대화, 대외 군사교류 등을 선호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북한군대내에서 노장층 군관들은 단지 상징적인 차원에서 예우가 주어질 뿐이며 실무에 있어서는 무능력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젊은 군관들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증언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구하더라도 이것이 군부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추진해나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대외적 교류가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군현대화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경험이 사회적으로 파급되어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개혁 개방을 주도해나가는 집단으로 변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북한 군대가 소유하고 있는 외화벌이 기업(군수산업 포함)이 북한의 대외적 경제교류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대는 이를 보다 활성화 또는 확장시켜 나갈 것인바, 향후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 정책을 군이 주도해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개혁·개방 조치가 본격화되어감에 따라 군대 충성→당의 충성→안정적인 사회적 지위획득이라는 기존의 군대인식에서 경제적 부의 축적이 제일이라는 인식으로 변모해가면서 당의 충성 무시→군대 충성 무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수령)의 군대로서 북한군대의 정치성은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군대는 당(수령)의 군대에서 국가군대를 지향하면서 탈정치화 과정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개방정책의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 북한에서는 각종 부정과 부패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복무에 대한 회의감이 커짐에

따라 당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각종 일탈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되면 될수록 군대의 일탈현상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대 당정치 활동만으로 부족하며 군대사찰기관(보위사령부)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제고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개방정책 심화과정에서 군대는 정치적으로 통제되기보다 군내부 사찰기관에 의한 인위적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군대의 정치적 활동 축소 등 군대의 탈정치화 과정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커져갈 것이다.

2) 정치적 참여 및 역할 축소

김정일은 승계권력 구축 과도기 단계에서 군부의 정치적 위상(명목적 위상)을 어느 정도 강화함으로써 군부의 불만을 해소하고 군부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의 권력 공고화에 힘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새로운 통치기간 동안 김일성 권력 초기, 변혁기(60년대)를 거치면서 당을 비롯한 요직에 군부의 높은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와 같은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군부의 당정치국 정·후보위원으로서의 참여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사실이 공식화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부터 그 수가 하향곡선을 그려왔으며, 비서국내의 군부 참여도 이미 그 이전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실질적인 1인통치 하에서도 이러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 배제추세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정치사상화를 위한 교육과 대중정치운동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북한군대를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당정책 관철을 위한 불굴의 투사”로 만들어 김정일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온 점에 있어서는 김일성

통치시대 이상이다. 러핑웰(John W. R. Lepingwell)이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기간 동안 군부의 정치적 개입이 증대될 경우 당에 의한 군부의 통제가 무너질 수 있다²³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체제유지 차원에서 김정일은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적 역할을 제한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부의 정치적 역할 축소에 더욱 치중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실현시켜 나감에 따라 김정일은 등소평의 실용주의적 노선 견지 차원에서 대중노선 활동의 강조가 경제적 낙후성과 직접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 캠페인 활동이나 집회 등을 약화시켜나기면서 경제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떠나갈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군대 역시 정치적 캠페인 등 정치적 활동을 완화하고 군대내부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전투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개혁·개방을 위한 조치를 확대 및 심화시켜나기면서도 정치적 민주화를 의미하는 정치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군대내부의 ‘단결과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당 및 국가에 충성하는 집단으로 유지시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상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3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기간 동안 안보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군부의 자율권에 대한 위협, 국가적 통합과 안보에 대한 군사적 핵심가치에 대한 도전, 군부의 정치적 개입 증대, 민간정부의 권위와 정통성 쇠퇴 등에 의해서 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함. John W. R. Lepingwell, “Soviet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August Coup”, *World Politics*, Vol.44, No.4 (July, 1992), p.550.

3) 내부치안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의 역할

김정일 체제 등장 후 추진되어온 ‘선군정치’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내세워 사회적 안전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경제난으로 북한은 광범위한 사회적 이완현상을 보여 왔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대의 역할이 보다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협동농장에서 감자를 심었다면, 밤새 다 캐가므로 안전성에서 이를 잡는 것도, 당의 교양을 통해서 이를 방지하는 데에는 역부족인바, 군대가 직접 개입하여 이를 통제한다. 중국국경을 통해서 탈북행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경비를 군이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이 추구되면 될수록 이러한 탈북행렬이 북한의 전반적인 국경치원(육지 및 바다)에서 이루어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의 치안유지 역할은 더욱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에도 중국 국경을 통한 탈북행렬이 보다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보이자 북한이 중국과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2003년 5월 인민군에서 비밀경찰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로 넘겼다가 최근 다시 군대로 되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⁴ 그러나 북한군대의 이러한 치안유지를 위한 역할 확대는 상당히 신축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된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군대의 치안유지 역할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북한군대의 이러한 치안유지 역할 확대 경험은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 중에서 초래될 수 있는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사건 발생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천안

24 『NKchosun.com』, 2003년 8월 5일

문 사태시 중국 군부는 학생소요 진압을 위해서 군부의 동원에 대해서 노장청 군부간의 의견 차가 있었으며, 젊은 군관들은 비교적 군대동원을 반대했던 데 비해, 모택동 이데올로기에 한층 더 길들여진 노장청 군관들은 이를 적극 지지했으며, 결국 군부가 학생소요 진압에 개입함으로써 치안유지를 이루었다. 북한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교적 노장청 군관들 간의 갈등 없이 쉽게 소요진압을 위해 군대개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4)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군부자율성 유지

브레즈네프 이후 고르바췌프가 개혁·개방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군부의 자율성이 문민지도자들에 의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군부의 불만이 노골화 된 적이 있다. 고르바췌프 하에서 외무부 장관 또는 문민 지도자들이 구소련의 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해나감으로써 군부의 자율성은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췌프 하에서 구소련의 안보정책에 관한 한 민간지도자와 군부간의 불일치는 대외관계와 국가전략 및 독트린 형성에 있어서 군부의 역할과 같은 이슈에 집약되었다.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는 군부가 고르바췌프의 ‘합리적 충분성’ 정책을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군부의 그러한 수용은 그렇게 나키지 않는 것이었다. 세바르드나제 외무부 장관이 주동적으로 강조해 나간 군비통제 정책은 군부로부터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안보정책에 대한 이러한 잠재적 갈등인식은 군부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군부의 핵심목표(국가의 안보를 제공할 의무)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되었다. 군사적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군부의 고유의 정책적 편향을 방어하기 위하여 구소련 군부는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것은 결

국 1990-91년 겨울과 1991년 이른 봄에 당·군간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구소련과 같이 과감한 개혁개방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김정일은 고르바초프와는 달리 세습정권의 정통성의 기초 위에서 탄생한 정권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당적 유일권력체제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군정치’ 기치 아래 군사우선주의 정책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군부는 김정일의 이러한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정책은 순수하게 경제적 효용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당한 부분 안보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군부의 위상과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2) 군사태세

북한이 대남 군사적 적화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군사력 증강에 더하여 군사력 배치를 위해서도 공세적 전략을 용이하게 하는 전방지역으로의 전진배치형태를 유지해 왔다. 군사력 증강 면에 있어서는 병력 수, 무기체계, 군사비 등이 증가하면 할수록 대남 군사적 적화전략을 견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의 감소추세가 예상된다면 일단 북한 군대의 정치적 목적, 즉 대남 적화전략 실현 의지의 완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군대의 전방지역 전진배치가 향후 남북한간의 군사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후방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예상 가능성에 따라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 및 안정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군사태세의 조정이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 즉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축소 노력이 현실화되어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차원에서 북한 군사력의 전진 배치 이동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형 통일 기능성보다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

1) 전쟁준비태세

북한은 국내의 정세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때에는 언제나 독자적으로 전면전, 국지적 제한전, 특공전 등을 감행할 수 있도록 인민군부대 조직의 준비성을 강조해 왔다. 별도의 전쟁기구가 필요 없이 전쟁발발 시 평시체제를 그대로 전시에 적용하는 「전시형국가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과도한 전쟁준비태세는 북한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 경제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이를 완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목적, 즉 대남적화전략 수행을 위한 군사준비 태세를 변함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한의 정치적 신뢰뿐만 아니라 군사적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무력을 통한 인위적인 통일 달성보다는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관리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군은 전쟁준비를 위한 전투태세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병력 수준

북한과 같은 소국은 한정된 인적자원문제를 극복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참여비율(military participation ratio: MPR)을 강대국에 비해

높이는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대비 인구수보다 상당히 많은 병력을 유지해 왔다. 향후 북한은 경제개혁·개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의 하나로 병력 감축으로 노동력의 증기를 도모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군대도 중국군대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정치성과 사회성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군사전문직업주의적이며 효율적인 전투력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국가군대로서의 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이 심화되면 될수록 경제구조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군대의 임시적인 대민 경제적 지원활동의 필요성이 축소되는 반면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군대병력 감축 요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배급중심 경제구조 하에서는 대병력 유지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임금중심경제구조 하에서는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규모의 병력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7·1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놓았는데, 동 조치에 따른 군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대병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병력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역량에 비해 북한의 병력이 과도하게 유지될 경우 군대의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군대내부의 불만과 이탈현상을 부추겨 체제위협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군사부문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조치 중의 하나가 병력감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군사력의 조정

북한의 '실제' 군사비에 대한 남한의 추정치는 국가예산의 30.9%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해볼 때 이렇게 많은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주장한다. 함택영은 북한의 '실제' 군사비에 대한 남한의 추정은 미 국방정보국이 소련 국방비를 예산의 1/3로 추정된 것과 같이 '단순추정'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이 경제사정이나 국내의 정세를 무시하고 수 십 년간 계속 총예산의 30-30.9%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²⁵ 이 주장은 북한의 군사 중심적 체제 유지 상황을 과소평가한 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북한에서 군사적 투자에 대한 중요도는 체제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거의 '상수에 가깝기 때문에 비록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군사적 투자는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결핍으로 군사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투자에는 한계가 따랐을 것이지만 경제적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군사부문의 우선적 투자는 변함없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예산대비 북한의 군사비가 오히려 상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국가예산 대 군사부문의 투자비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력의 상황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군사부문에 대한 정치적 의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30% 이상의 군사비 투여는 하향 조정되기보다는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

25 함택영, "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http://www.indis.re.kr>>, (2002.10.10) 참조

그러나 향후 북한은 군사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는 자원들을 민간 부문에 재분배하면서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체제안보능력을 제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군사력 조정을 단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력 유지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대남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모택동이 주장해 왔던 ‘인적요소’ 중시를 지양하고 군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실용적인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경제개혁·개방을 추구해 나가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중시하게 될 것이며 북한 군대에도 과학과 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군장비 현대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전투력 제고를 위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대신 군대의 경제지원활동을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갈 것이다. 모의군사 훈련에서 실전을 위한 군사훈련이 증가될 것이며, 개방정책이 확대될 경우 주변국, 특히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개혁·개방과정에서 군복무 기피 풍조, 탈영, 절도, 사기 등의 부정적 행태가 확산될 수 있고,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군대 사기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이 필요로 하는 과학 및 기술발전 정책을 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과학·기술회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 교육내용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북한 당국이 정치·군사강국에서 경제강국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독려해 왔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험을 ‘인공위성시험’ 성공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과학 기술 발전상과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군사 분야의 과학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압력의 증가로 인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우선 제재대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협상을 통해서 중단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억제력 중심의 군사력 강화 노력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력 강화 가능성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소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4)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구체화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활성화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저해하는 일련의 군사조치 및 군사장비, 시설의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도로 개설이나 주변의 군사적 긴장해소를 위한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서 단계적인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들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 양측의 정치적 신뢰 구축 선언 표명과 실무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수시 개최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남북이 현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군사 문제들에 대하여 남북간 및 남북한과 미국간의 대화가 추진된다. 경의선 연결 및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남북한간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이행하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이행될 것이다.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이행해 나가면서, 동 회담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같은 실무회담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군 당국지간 핫라인 설치, 군사훈련 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협의와 실천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발적 무력충돌 및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당국지간 직통전화의 연결이 확대되어 운용될 것이다. 또한 군사정보 교환과 대규모 부대 이동 및 군사훈련에 대한 상호 통보 및 참관이 실시될 것이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이 협의·추진되며, 남북간 군비통제의 기본 방향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내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 장비 및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범위를 협의, 시범사업 등이 실시될 것이다.

「방어적 전력배치로의 전환 → 대량살상무기·공격용 무기 제거·감축 → 본격적 군축」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각 단계의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 공동감시단 및 검증위원회가 설치·운영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폐기 및 공격용 무기를 감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군비통제를 이행·감시하기 위한 검증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될 것이다.

<표 II-5> 개혁·개방정책 확대 과정에 따른 북한군대 변화 양상

	부분개혁체제기		사회주의 상품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보수기	전향적	도입기	도입기
중국		1978이후	1984-	1992-
북한	1985-200?			
정치 경제 상황	·경제피해 ·대의경제협력 미미	·경제안정과 정치적안정 ·대의 경제협력 확대	·경제성장 제도진입 ·대의 경제협력 공고화	·국제사회 보통 국가
군대 의 역할 과 기능	·정치적 속성 견지 ·내부 치안 역할 확대 ·경제적 역할(노동력) 지속	·부분적 군대의 정치적 참여 완화 ·부분적 내부 치안 역할 지속 ·부분적 경제적 역할 완화	·군대의 정치적 참여 축소 ·내부 치안 역할 축소 ·경제적 역할 축소	·군대의 정치적 참여 축소 본격화(당의군대→국가 군대 전환 추진) ·군대 전문직업주의화 추진 본격화
군사 태세	·전쟁준비태세 불변 ·대병력(100만)이상유지 ·비대칭적 군사력 증강정책 고수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증강)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부정	·전쟁준비 태세 부분적 완화 ·부분적 병력 축소 ·비대칭적 군사력 증강 정책 동결 ·초보적 군사신뢰 조치 추진	·전쟁 준비태세 포기 ·적정 병력유지 ·비대칭적 군사력 증강 정책 동결 지속 및 군 현대화 추진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확대	·평화적 공존을 위한 군사태세 유지 ·군 현대화 계획 확대 추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본격화
대남 군사 정책	·대남무력통일 기조유지 ·대남 군사적 적대 정책 견지	·대남무력 통일기조완화 ·대남 군사적 적대조치 완화	·대남무력통일 포기 ·대남 군사적 적대조치 완화 본격화	·대남 군사적 적대 조치 포기
남북 평화 통일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확대	·실질적 평화통일 상황 (De Facto Unification) 진입/정치적 평화통일 담보

2. 남북관계요인

남북관계는 크게 갈등과 협력의 관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동서독이나 남북예멘의 경우처럼 남북한의 경우도 평화통일을 상정할 경우, 갈등 관계의 심화나 지속은 통일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협력의 발전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의 서독 체제로의 흡수로 귀결되었고,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인 변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동독 내부의 모순과 그에 따른 반체제 운동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독 주민이 사회주의체제를 거부하고 서독 체제를 수용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한 동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도 영향을 미쳤다. 동서독의 교류와 협력은 체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해의 증진과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남북관계의 변화 추이는 지난 30여년의 남북관계를 돌이켜보면 남북관계의 갈등과 협력의 양상 변화가 한반도의 안정 여부나 통일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 남북 당국간 대화가 시작되어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남북한은 적대적 대치구도 속에서도 갈등 완화의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 대화의 중단은 곧 남북간 긴장을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1984-85년 기간과 1988-92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활발한 남북 당국간 대화는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탈퇴 선언 이후 남북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으며,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예방 공격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의 증대는 한반도

의 긴장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갈등적 상황과 협력적 상황을 반복하면서 점차 명목적인 대화의 전개로부터 실질적인 '관계' 양식을 쌓는 양상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1) 당국간 관계 수준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활발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를 산출하였고 통일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동 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제도화하는커녕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기본합의서』에 따른 외형적인 형태의 조직들이 구성되었으나 가동되지 않았고, 북핵 문제로 인해 당국간 관계는 교착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비록 남북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명목적인 전개가 통일에 대한 논의나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의 조성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반드시 통일 국가의 등장으로 직접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에서의 협력의 증대는 남북간 통일을 논의하는 환경을 개선해주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남북간의 갈등의 지속 또는 심화는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며, 때로는 안보상황의 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남한 내부의 여건 및 정책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여건 및 정책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남북한 각각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남북관계 차원의 변화 자체가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간의 협력 또는 갈등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다시 남북한이 지속적으로 관계 발전을 이루어나기여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경우 1970년 3월 19일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동독의 에어후르트를 방문하여 슈토프 동독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개월 후인 1970년 5월 21일 서독의 캄셀에서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관계 발전을 위해 인식을 같이 한 동서독은 1971년 9월 30일 우편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이어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통행과 수송을 보장하는 통행협정 서명(71.12.17), 동서독 간 교통조약 체결(72.5.26) 등을 거쳐 1972년 12월 21일 상호관계 정상화에 관한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기본조약」 체결을 계기로 동서독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이 제도화되었고, 인적, 물적 교류도 증대하였다. 즉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 간에는 우편 및 전신 협정 체결에 관한 협의, 보건 분야에서의 조약 체결에 관한 협의, 법적 협조 분야에 대한 조약체결 협의 등 제반 분야에서의 조약 체결에 관한 협의와 함께 통신위원회, 교통위원회, 경계선위원회 등의 협의도 진행되었다. 또한 양자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으로 1974년 5월에 발효된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상주대표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교류협력분야에서 예컨대 체육행사에 관한 양측의 합의는 매년 서독에서 평균 40회, 동독에서 평균 30회에 걸쳐 친선 경기를 갖게 되는 정도로 발전하였다.²⁶ 동서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서로

26 서병철,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 (서울: 지식산업사, 1988), pp. 41-45.

다른 이념과 정치체제 때문에 서로가 경쟁하고 대립하는 일이 국력의 낭비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호 체제의 부담 요인이 적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동서독의 경험에서 시사하듯이 남북관계의 협력적인 양상으로의 변화는 남북 상호간에 거래 및 접촉의 빈도와 그 범위와 폭을 증대시키고 상호 의존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의 증대는 남북한 정부, 사회집단, 개인 간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 입장 및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관계'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²⁷ 즉 일정한 수준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될 경우,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계 단절의 가능성을 낮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관계의 협력의 증대는 이론적으로 평화적 통일 여건 조성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남북협력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변인은 남북 당국간 관계 추이다. 1970년대 초 당국간 대화가 시작된 이래 남북관계는 매우 느리지만 적대적인 관계를 부분적이거나 완화시켜올 수 있었다. 즉,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중반, 1990년을 전후한 시기, 그리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당국간 관계의 전개 추세를 회고해보면 당국간 관계의 변화 추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협력 또는 갈등의 양상을 기늴하는 지표가 된다.

남북 당국간 관계 추이는 당국회담의 빈도수와 그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당국회담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남북 당국간 회담의 빈도수가 증대한다고 하여 반드시 남북관계가 협력적인 양상으로 변한다고

27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989-92년 기간 중에 약 160회의 남북 당국간 회담이 전개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안정화되지는 않았다. 이외는 달리 21세기에 들어 전개되고 있는 남북 당국간 회담의 내용은 1990년을 전후한 시기의 남북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때부터의 남북당국간 관계는 당국회담의 빈도수 측면에서 2003년까지 90회가 넘었다.²⁸ 특히 당국회담은 남북장관급회담이 대체적으로 3개월마다 열리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간 회담의 내용이 남북철도·도로 건설, 개성공단 건설,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분쟁해결 절차와 같은 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 조치들과 같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국 회담의 방향은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분야로 정량적인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국간 관계 추이는 당국 회담의 빈도수를 측정하면서 당국회담의 내용 변화에 대한 평가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인적교류 발전 수준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상정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지고 상호간의 신뢰가 쌓여야 할 것이다. 당국 차원이나 민간 차원의 구분에 상관없이 남북한 사이의 이해 수준 제고와 신뢰 구축은 인적 교류

28 통일부, 『2003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분야별 추진현황』 (서울: 통일부, 2003), p. 27 참조

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차이에 대한 이해는 접촉을 통하여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하여 숨은 의도를 가지고 접촉과 대화 교류를 할 경우,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도 있으나, 접촉이나 대화 교류가 없는 관계 개선을 생각할 수 없다.

동·서독과 중·대만의 경우, 인적교류가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고려를 넘어서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과 분단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서독의 동독 지원은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가져왔으며, 동독은 별도의 국가체제 유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정적, 경제적 반대급부라는 실리의 확보를 위해 서독과의 인적, 물질 교류를 점차로 확대하였다. 동·서독과 중·대만의 사례는 인적 교류의 증가 추세가 관계 개선의 진화 추세와 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1960년대 후반부터 동독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까지의 인적교류의 규모를 보면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선택한 동독인들의 결정의 배경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아래의 <표 II-6>에서 볼 수 있듯이 1967년 동독 및 동베를린을 방문한 서독주민의 수가 142만 명 정도였었던 데 반하여 1987년에는 550만 명의 규모로 증가하였다.²⁹ 이와 같은 활발한 인적 교류는 동독 사회주의체제 내부의 서독 및 서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발하고 체제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분출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29 “동서독 관계에 관한 주요 통계,” 서병철,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 (서울: 지식산업사, 1988), p. 171.

<표 II-6> 서독 거주자의 동독 및 동베를린 방문자 및 동독
연금수혜자의 서독 방문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서독 주민 동독 방문자수	동독주민 서독 방문자수
1967	1,423,000	1,072,000
1970(동독은 1971)	1,254,000	1,045,000
1975	3,123,000	1,330,000
1980	2,746,000	1,554,000
1981	2,086,000	1,563,000
1982	2,218,000	1,553,000
1983	2,219,000	1,462,000
1984	2,499,000	1,546,000
1985	2,600,000	1,609,000
1986	3,800,000	1,757,000
1987	5,500,000	2,204,200

출처: Joachim Nawrocki, *Die Beziehungen d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Berlin 1986, S. 120ff 및 독일 연방공화국 내독관계부 발표문; 서병철,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 (서울: 지식산업사, 1988), pp. 171-174.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도 통일은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공식적인 인적 교류가 점차로 활발해지고 있다. 대만이 대륙방문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이래 1987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대만인 1,550여 만 명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대만은 1993년에 양안인민관계조례를 통해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도 이산가족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대만 방문을 허용하였다. 대만인의 중국 방문 규모보다는 훨씬 작지만, <표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의 대만 방문도 1980년대 후반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도에는 약 136,600명에 달하였다.

중·대만간에 발전되고 있는 교류 협력의 확대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양안 주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 II-7> 중국 국민의 대만 방문 현황 (단위: 백 명)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5
인원	13	57	110	126	175	238	312	569	718	911	1,178	1,366	651

출처: 대만 행정원대륙위원회, <http://www.mac.gov.tw/statistic/ass_lp/a6.jpg>.

남북간 인적교류의 추이는 교류인구의 규모와 교류의 범위의 변화로서 구체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남북한은 1990년대 이후 인적교류에 서서히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교착관계나 군사적 사건들이 전반적인 남북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에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 조치에 발맞추어 인적 교류가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점차로 확대되고 그 분야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북한이 식량난에 직면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분야에서 민간분야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남북간 인적 교류는 <표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북 포용정책이 실시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강산관광객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한 국민의 방북을 기준으로 할 때, 1989년의 1명에서 2003년에는 13,398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인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남북 주민간의 접촉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대화의 내용도 점차 다양해짐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은 2000년 이후 양적인 발전과 아울러 질적인 발전도 나타났는데, 남북을 왕래하는 형식의 교류 협

력들이 성사되었으며, 특히 북한 측 공연예술단 등 비교적 대규모 방문단의 서울방문공연이 성사되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3년까지 여덟 차례의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상봉행사를 통하여 총 8,051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고 16,672명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다.³⁰ 남북한 사이의 인적 교류 범위가 다양해지고 그 폭이 깊어질수록 협력적 양상으로의 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으며, 이는 통일을 향한 긍정적 역할로 작용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수백만 명 규모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표 II-8>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 현황 (단위: 명)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신청	199	244	303	21	78	563	249	1,194	3,980	6,199	8,070	9,148	13,502	14,202
승인	187	243	257	19	54	543	170	1,172	3,716	5,997	7,737	8,805	12,979	13,753
성사	183	237	257	18	12	536	146	1,015	3,317	5,599	7,280	8,551	12,825	13,398

※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의 관광객 수는 포함하지 않음. 2003년은 11월 현재
출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49호(2003.11.1~11.30), p6.

그러나 인적 교류의 과정에서 북한이 여전히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를 우려하고 있고,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은 교류 협력 활성화에 일정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표 II-9>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이 아직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30 통일부, 「2003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분야별 추진현황」, (서울: 통일부, 2003), p. 52.

즉 동서독의 경우와 남북한의 경우를 비교하면, 인구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남북한간 인적 교류의 규모는 아직도 제도화된 양자관계의 구축과는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1년도의 8·15 방북단 파문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며, 북한지도부가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로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즉 남북교류가 여전히 냉전시대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서독과 중대만의 경험을 보면, 남북관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인적 교류의 지속적인 증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II-9 > 연도별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 현황 (단위: 명)

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원	0	291	175	103	6	0	62	706	191	1,052	997

출처: 통일부, 『2003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분야별 추진 현황』 (2003.12), p. 29.

(3) 남북경협 발전 정도

1990년대에 북한 핵문제에 의한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최소의 정도로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남한과의 교역관계 지속은 점차 북한에게 있어서는 유용한 외화의 소득원으로 작용하였다.

동서독의 경우는 분단 초기에서부터 상품 교류가 있었다. 양독간의 교역 규모는 <표 II-10>에서 보듯이 1950년의 8억 1천만 마르크에서 1987년에는 194억 마르크로 증가하여, 24배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서독은 동서독 교역을 베를린 통행로의 지속적인 유지 수단, 즉 양자간의 관계 지속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동독공산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동독의 경우 초기에는 약화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독과의 교역이 필요하였으며, 일부 동독제품의 경우에는 서독 시장만큼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 없었다. 이후에도 서독과의 교역은 국가내부거래 형식을 띠었기 때문에 동독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결국 동서독의 경험은 양독관계를 유지하며 개선시키는 기능을 수행한 셈이다.

<표 II-10> 동서독 교역 규모 (단위: 백만 DM)

연도	수출	수입	총액
1950	359	451	810
1955	576	584	1,160
1960	1,080	1,007	2,307
1965	1,225	1,249	2,474
1970	2,484	2,064	4,548
1975	4,028	3,391	7,419
1980	5,875	5,855	11,730
1981	6,129	6,349	12,478
1982	7,080	6,988	14,068
1983	7,681	7,562	15,243
1984	7,251	8,241	15,492
1985	8,586	8,158	16,743
1986	11,973	8,598	20,571
1987	11,140	8,263	19,403

출처: <표 II-6>과 동일

중·대만의 경우에도 양안간의 교역은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되고 있다. 양지는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당국간의 직접협상이나, 전면적인 3통(통행, 통신, 통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상호간에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나아가서 중장기적인 통합을 목적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양안교역 규모는 1990년도 49억 달러에서 대만이 1991년 중국 방문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한 후 1992년도에 144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1999년도에는 25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³¹ 또한 대만의 중국 투자는 1990년도 2억 3천만 달러에서 1993년도에 31억 달러에 달했고, 1990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대만의 중국 투자 규모 총액은 약 14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남북한도 1988년 이후 교역을 시작하였고, <표 II-1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역 규모는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남북경협 내용도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2003년 현재 무역총액이 3,500억 달러가 넘는 남한의 입장에서 남북교역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며, 경협 내용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독과 중·대만의 경협을 보면 교역규모의 획기적인 증대는 분단국 양자관계의 협력적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독은 절대적인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경협을 동독의 서독 접근을 유인하는 데 성공하였다. 남북경협의 발전 수준의 추세는 경협의 규모와 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을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31 『중앙일보』, 2000년 3월 21일

(4)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와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

대동독 지원은 크게 재정적 지원, 각종 이전지출 성격의 지원 및 동서독 국경지역의 경제적 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동독 재정지원은 ①양독간 채무청산용 차관인 Swing, ②내독교역 범주 내에서의 거래시의 상업대부, ③은행에 의한 재정차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 대동독 이전지출은 서독정부가 일정 목적을 위해 동독에 지불하는 금전적 지원의 형태로서 주로 통행 및 통신부문에 이루어졌다. 동독의 교통시설에 대한 서독의 투자는 동독 국민경제의 사회간접자본의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궁극적으로 통일이 된 시점에서 볼 때 그 효율성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민간차원의 이전지출형태로서 동독의 만성적 물자부족을 고려한 서독주민의 동독 가족·친지 등에 대한 현물 공여, 동독지역을 방문하는 서독인의 강제교환금과 비지수수료, 동독으로의 통행로 상에 설치된 인터숍(Intershop)과 같은 면세상점들의 서독 주민에 대한 판매수입 등 민간이전지출을 들 수 있다.³²

북한의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상당기간 자체적인 능력으로 북한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북한 경제의 피폐 현상은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 남북 양자관계의 긴장 수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실제로 있어서 북한 당국자들은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이외에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원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32 김영운 외,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대북지원의 추이는 규모와 함께 지원의 구조적 내용을 살핌으로써 남북관계 협력의 질적인 변화를 살필 수 있을 것이며, 동일한 맥락에서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는 북한의 GNP에서 차지하는 남북교역량의 비중과 북한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남북교역량의 비중으로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11>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 (단위: 만 달러)

연도	정부 차원	민간 차원	합계
1995	23,200	25	23,225
1996	305	155	460
1997	2,667	2,056	4,723
1998	1,100	2,085	3,185
1999	2,825	1,863	4,688
2000	7,863	3,513	11,376
2001	7,045	6,494	13,539
2002	8,375	5,117	13,492
2003	8,701	7,061	15,762

출처: 통일부, “2003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http://www.unikorea.gov.kr>>.

<표 11-12> 북한무역총액 대비 남북교역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남북교역	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5	48	642	671
무역총액	470	270	260	261	218	282	196	217	142	140	190	220	220	-
점유율	0.28	41	65	7.1	9.3	140	128	141	154	225	21.6	17.8	284	-

출처: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각 년도)와 한국은행, 「2002년 북한 경제성장을 추정 결과」 (2003.6)를 참조하여 작성. 단, 2003년의 경우는 11월까지의 통계임.

(5) 군사적 갈등 수준과 군사적 신뢰 구축 수준

냉전 시대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을 전후하여 활발하게 전개된 남북당국간 대화는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시켰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도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전반적인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제한적 진전과는 달리, 1990년대에 걸쳐 남북 정치·군사적 관계는 그 이전의 대립관계로 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즉 1993년 봄 남북협상 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 1994년 6월의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 고조와 7월의 김일성 사망, 동·남 서해안으로 이어진 북한의 군사적 침투 행위 등은 한 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보여주었던 사례들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군사적 신뢰구축은커녕 남북한 간의 군사적 갈등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북·미 양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주장 하였으며, 한·미는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으로 대응하였다. 4자회담은 1997년 12월 제1차 회담 개최 이후 1999년 8월 제6차 회담까지 진행되었으나, 의제 및 당사자 문제에서의 입장이 대립됨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는 논의하지도 못한 채 중단되었다.³³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 차례의 국방장관회담이 열렸으나, 북한 측은 남북 군 당국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논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후 개성공단 건설과

33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4자회담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로는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활성화 방안”,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43-85 참조.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하여 남북 군 당국간에 접촉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북간에 군사적 갈등 완화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직접적인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남북관계의 협력적 양상이 증대하는 경우 남북관계의 갈등적 양상이 완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서 갈등적 현상의 발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국가간에도 군사적 충돌의 발생으로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단절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관계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서는 적어도 튼튼한 평화공존의 상태가 제도화되기까지 갈등의 발생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것이며, 평화공존의 상태에서도 통일을 향한 관계의 안정화를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 남한 정부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의 진전과 균형을 맞추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나 군 당국간 협상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2002년 10월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북핵 위기는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나 남북관계가 통일로의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는 지표로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동서 진영간의 대립과 경쟁의 구도 속에서도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틀 속에서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서서히 쌓을 수 있었다.

남북관계의 협력과 갈등을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군사적 갈등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이나 인적교류

등은 군사적 갈등이 완화되고 상호간에 신뢰가 구축되는 경우에 안정적인 상태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신뢰구축 추이를 살피는 구체적 지표로는 군사회담의 빈도수와 군사회담의 내용의 질적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적 갈등은 군사적 충돌 빈도와 긴장의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3. 국제요인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의 구체적 변수로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 곧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그 변수의 개념은 이들 4개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한반도 통일 또는 북한체제의 내구력(지속성)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으로 정의된다. 4개국의 대북정책 방향은 각각 3개의 지표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측정될 수 있는바, 곧 (i)북한정권 교체여부, (ii)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여부, (iii)남북한 통일지원 여부 등이다. 이들 변인과 지표의 개념을 4개국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주변 4대국 중 한반도 문제에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고, 또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으며, 대북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과 밀접한 정책 공조를 통해 공동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이후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쌍무협상 체제를 이끌어 온 바 있으나, 쌍무협상이 북한핵 문제 해결에 실패하였다고 판단,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 등 다자협상 체제를 추구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대하다.

1) 북한정권 교체의지 여부

당초 대북 포용정책이 기대했던 북한 변화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김정일 체제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최근 김정일 정권 교체 (regime change)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미국 정책결정기구 내에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³⁴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정권 교체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정권 교체의지가 있느냐의 여부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여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현재의 남북 분단상황을 유지하고자(“status quo”)하느냐 여부이다. 미국은 대외정책의 기초상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 세계적 확산을 추구하고 있으며,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있다.³⁵ 이런 점에서, 북한 김정일 체제의 내재적 독재성과

34 Nicholas Eberstadt, “The North Korean Nuclear Drama: Another ‘Twenty Years’ Crisis?”, Paper presented at “Korea’s Rise as a Regional Power” Conference of the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Washington D.C., October 8-10, 2003.

35 미행정부는 세계적 범위에서 인권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테러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2002년 9월 22일 완성시켰다.

인권유린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지속과 국제 테러리스트와의 연계 가능성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규정은 바로 이러한 점에 그 배경이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한 반도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최근 많은 논쟁을 일으킨 바 있고 또 그만큼 변동성이 큰 사안인바, 과연 미국이 대한반도정책에 있어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하느냐 여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3) 남북한 통일지원 여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은 자유민주체제에 기초한 통일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통일이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반도정세의 전개에 따라 나타나게 될 다양한 형태의 통일시도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2)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

중국은 현재 아심찬 국력(國力) 진흥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제에 한반도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며, 철저히 ‘현상유지’ 정책이라

고 할 수 있다.³⁶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북한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목표에 더욱 투철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그로 인한 미국의 강경책으로 인해 한반도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특히 북한내 급격한 변화로 인한 만주지역의 안정 저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탈북자의 만주지역 침투로 인해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1) 북한정권 교체의지 여부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를 설정, 이른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을 한 미 세력의 북진을 막는 완충지역으로 간주하여, 북한체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왔으나, 최근 이러한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³⁷ 중국의 거둬들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그에 따라 미국의 강경정책을 유발하여, 한반도 안정이 훼손되게 됨에 따라, 북한의 도발적 자세를 제어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신의주 특구의 책임자로 임명된 인사를 중국이 구금 조사한 사례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려는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북한정권 교체의지가 있느냐 여부는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36 최춘흠, 『중국의 대한민국정책 전망: 외교·안보 분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37 과거 순망치한(唇亡齒寒)으로 대변되었던 북·중 양국간 전통적 혈맹관계를 뜻한다.

2)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현상유지는 중국의 경제개발 작업에 필수적인 외부환경 요건으로 인식된다. 중국이 상당기간 동안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북한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대남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제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남북한 통일지원 여부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경계하고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에 방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봉쇄망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중국을 세계전략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동북아에서 중국의 안보차원에서 미국을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 중국은 남한에 의한 통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중국은 한-미 연합세력의 북한 통합을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에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중국이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지원 여부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3) 일본의 대북정책 방향

일본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한-미간에 이상(異狀)현상이 감지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회로 동북아시아에서 한 단계 제고된 새로운 정치·군사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⁸ 곧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對)한반도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핵 위기로 인한 동북아 세력 재편성 과정에서, 일본의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로 읽혀진다. 북한핵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이 강경화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아울러, 6자회담 참가에 의욕을 보이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1) 북한정권 교체의지 여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 때만 해도 북한의 현체제와 협상을 통해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던 일본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화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일본의 북한정권 교체의지 여부는 미국 대북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북한정권 교체 의지 여부는 일본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2)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여부

38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남북 등거리 외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미·일 동맹의 강화 이후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은 특히 한반도 ‘유사시’ 대응방안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고심해왔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일본의 현상유지 정책 여부는 일본의 대북정책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3) 남북한 통일지원 여부

주변 4국 중 남북한 통일을 가장 소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일본이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최근 수년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의 대북정책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이 앞으로 남북한 통일을 지원할 것인가의 여부는 일본의 대북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

(4) 러시아의 대북정책 방향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한반도 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었다. 해방 이후 분단과정의 개입, 북한에 “소비에트”식 공산체제의 건설, 그리고 김일성집단의 6·25 남침 등에 소련의 영향력이 깃들여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운동 이후 소연방이 붕괴되고, 경제가 침체일로로 걸으면서,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주변 4국 중 가장 미미한 채로 남아있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회의로서 1996년 출범한 「4자회담」에 일본과 러시아가 제외되면서, 러시아는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하는 한반도 문제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여왔다.

현재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 참여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가 어떠한 대북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가는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과 북한체제 지속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1) 북한정권 교체의지 여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한국과의 수교(1990)를 거치면서,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 러 양국간 신우호조약 체결을 계기로 과거 우호적인 관계를 일정부분 복원하려 시도하고 있다.³⁹ 그러나 러시아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대한반도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 김정일 정권을 계속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국력 향상을 위해 실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입장인바, 북한이 미국과의 대립국면을 지속할 때 이를 마냥 지원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와의 대결을 피하기 어려울 때, 러시아가 북한정권 교체의지를 갖느냐의 여부는 러시아의 대북정책 방향을 기능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2)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여부

39 여인근,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푸틴의 한반도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소련 시절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지원하던 러시아가 체제 전환 이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한국과의 외교 수립 이후, 남한에 중점을 둔 외교를 추구한 바 있었다.⁴⁰ 현재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여부는 러시아의 대북정책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3) 남북한 통일지원 여부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자본주의체제로 체제전환을 이룩한 러시아가 남북한 통일문제에 관하여 종래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갖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러시아는 통일된 한국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남북한 통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지원 여부 역시 러시아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

40 여인곤,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푸틴의 한반도정책」.

4. 남한요인

(1) 통일의지

대북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기반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간에 공히 존재하는 냉전구조 및 냉전 문화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남한사회는 화해협력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문제를 화합적 차원에서 포용하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의 형성을 차단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따라서 남북관계진전에 대응하여 대내적 인프라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사회가 이분법적, 비타협적 구도로 재편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냉전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 즉 대북정책을 둘러싼 타협과 화합의 구도를 설정하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기반이 미진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남북관계 개선노력과 통일정책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남한사회 내의 갈등 심화는 국가신인도 저하 및 통일정책 추진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통일의지의 약화로 볼 수 있다. 즉 통일 추진과정에서 남한내부의 통일의지와 이를 구현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통일의 가능성은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통일을 달성하려는 통일의지와 연관된다. 남한의 통일의지는 통일을 하려는 의지의 강약을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형태로 통일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통일의지는 분야별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그리고 대외적 차원으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각 분야의 통일의지는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연계된 차원에서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 정치적 의지

정치분야는 통일을 위한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고, 국민 여론을 대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정치분야의 통일 의지는 통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의미를 지닌다. 통일에 대한 정치권의 결정은 곧바로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을 의미하며, 정치적 의지는 통일 의지를 지표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치적 통일 의지는 정치 리더십의 통일 의지와 정치권의 통일 정책 합의 정도의 두 가지 변인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정치 리더십의 통일 의지는 리더십 차원에서 통일에 대해 가지는 의지를 말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한의 경우 대통령의 통일 의지는 정치적 의지를 대표한다.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 볼 수 있는 정부 관련 부처의 통일 의지도 광의의 의미에서 리더십의 통일 의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의 통일 방향에 대한 발언의 빈도와 강도는 통일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통일 방향에 대한 발언의 빈도와 강도는 직접적인 정치적 통일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 부처의 장관 혹은 정책 담당자의 통일 방향에 대한 발언의 빈도와 강도도 리더십의 통일 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의회 정치 구조상 정치권의 통일 정책 합의 정도는 정치적 통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대북 포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남한사회 내부의 통일에 대한 합의 정도는 통일 정책 추진 기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정치권의 정쟁 및 정책을 둘러싼 분열은 통일 정책 추진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권의 통일 정책 합의 정도는 통일에 대한 직접적 정치적 의지를 나타내는 변인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여야간의 합의의 정도로 지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구조가 상존하는 상태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은 동시에 비판적인 여론을 동시에 생성시키며, 이는 다시 정당정치에서 증폭, 재현되는 순환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는 정쟁의 소지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켜 왔다. 따라서 통일문제 정쟁화의 재생산 구조의 해체와 생산적인 합의구조의 형성은 통일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지의 표현은 정당 간 협의를 통한 대북정책 수립, 국내정치 이용 금지, 국회 및 정치권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노력의 정도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국민 참여를 위한 개방적 대북정책 수립체계의 구축 및 대북정책 추진과정의 공론화, 정책의 투명성 강화도 광의의 의미에서 정치적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여론수렴기능의 제도적 강화와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지지 유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도 정치적 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지의 강화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을 위한 대북정책 비판집단의 설득 및 적극적인 대 국민홍보작업과 통일과정에 대한 현실화된 인식의 유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⁴¹

정치적 차원의 통일의지는 점차 현실화, 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리더십 차원의 통일의지의 표현은 선언적 차원의 담론체계에서 벗어나 구체화, 현실화의 추세를 보일 것이다. 북한체제의 위기구조 심화로 인한 대결구조의 완화와 아울러 남한의 분단체제관리 비용은 증가하게 될

41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60-61.

것이다. 이에 따라서 리더십 차원에서는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확대 등 실질적 차원의 담론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통일문제의 정쟁화도 남한의 정치 발전 및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점차 완화되는 추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점차 국내정치적인 상황과 연계되는 정도가 약화되는 추이를 보일 것이며, 따라서 여야간의 정책적 협의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적 의지

경제적 의지는 경제적 차원을 고려한 통일의지로 규정될 수 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존재하며, 각각 경제적 이윤의 추구를 목표로 경제행위를 한다.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에 대한 통일의지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통일의지의 변인은 남북경제협력의 구조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경제관계가 배타적이거나 통일 및 남북화해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호이익이 수반되는 경협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 통일에 대한 경제적 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북관계 발전과정과 남북경협의 구조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선순환의 관계를 맺게 될수록 통일에 대한 경제적 의지는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경협의 구조가 통일과정과 선순환의 관계를 맺을 경우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의 통일지향형 경제활동이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의지를 구체화한 지표로서는 남북경협의 진전정도 및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 및 철도 연결과 같은 구체적이고도 거시적인 진전과 아울러 기업참여의 활성화 상황의 도

래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자발적 수렴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이윤의 실현 가능성도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경제주체의 경우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하므로 남북경협의 수지타산의 정도는 구체적인 측정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의지

사회적 의지는 통일의 당위성 및 방향성에 대한 사회의 의지를 의미한다. 이 분야의 변인으로서는 통일에 대한 열기, 통일비용 분담의지, 통일 당위성에 대한 인식정도, 시민교육형 통일교육의 도입, 냉전문화해체노력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적인 통일 열기는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을 압박하므로 통일의 시기 및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통일열기를 보다 신뢰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변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비용 분담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사회적 차원의 통일의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문제를 각 개별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도 사회적 통일의지에 대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인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여론 추이의 변화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의지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통일비용의 준비상태 및 규모의 증감도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체제 하의 통일교육은 남북통합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의 성격을 지

향하기보다는 국민윤리차원의 이념교육의 특성을 지녔다. 과거에 통일교육은 국가안보라는 상위체계를 위한 하부구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통일교육은 안보교육과 소수 선발전원에 대한 방북교육 시스템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체제는 적극적인 통일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방어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기반 및 통일역량의 현실화라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및 지원체계의 구축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의지의 강화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와 남북한간의 대립구조의 내적인 표현형태가 냉전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사회의 냉전문화는 분단으로 인한 비정상적 분단문화체계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문제는 이와 같은 냉전문화가 남북 분단과 대립이라는 장기적인 형성과정을 거쳤으며, 따라서 그 영향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냉전문화의 해소를 위한 내적인 노력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남갈등의 소지는 커지고 있으며, 사회가 이념적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은 냉전문화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냉전문화가 상존하는 상태에서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은 어려우며, 따라서 냉전문화해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의 정도는 통일을 지향하는 사회적 의지의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군사적 의지

군사적 의지는 군사분야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말한다. 군사분야는 무력으로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재적 논리인 만

큼, 그 자체로서도 통일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북한지역의 돌발사태를 예상한 군 편성 및 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정상국가로서 북한체제의 장기적 존속을 상정하는 군 편성 및 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군사적 차원의 통일의지는 각각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는 경우 군사분야의 변인은 통일지향적 군사전략의 운용상태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와의 직접적 대립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향후 변화가능성 및 돌발사태 등에 대비한 군의 대응체계의 검토는 군사적 통일의지를 확인하는 변인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인 지표로서는 통일과 연계된 국방전략의 내용분석, 군편성 및 운용상태의 분석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통일과 연계된 국방비의 규모 및 증감추이도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내구력 약화과정의 진행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구조의 성격도 변화하면서 군사적 차원의 대응태세 역시 성격이 변화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북한내부의 급변사태와 대규모 난민사태 등에 대한 남한의 군사적 대처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점차 주적개념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적국에 대한 대처 방안 및 능력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5) 대외적 의지

대외적 의지는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과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분단 및 해소는 민족내부의 문제이자 동시에 민감한 국제적 문제의 성격을 가진다. 한반도는 냉전시기 동안 동서 양진영간 갈등을 대리하는 전초기지였으며, 주변국은 남북한을 자국의 한반도에 대

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구도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 종식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주변4국의 대한민국 영향력 강화 노력에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주변4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를 기조로 한 상호 협력과 견제의 새 질서구축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4국의 협조가 없다면 통일과정은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통일의 성사여부조차도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4국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통일외교는 대외적 차원에서 통일의지의 구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대외적 차원의 통일의지를 확인하는 변인으로서 남한의 대외통일외교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미·일·중·러 4국에 대한 남한의 통일외교의 방향을 구체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맹차원의 한·미관계의 변화의 방향성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미동맹은 냉전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핵심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는 한·미동맹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전개될 한·미동맹 관계의 성격변화는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외적 의지를 측정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 능력

1) 정치권의 통일방안 합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로드맵 형태의 통일 이정표(里程碑)라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통일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통

일편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전쟁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원칙은 평화적 합의통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반면 세계사적 추세와 남북한의 증폭되는 국력 격차 그리고 북한체제의 미래 전망의 부재 등은 현실적으로 남한 중심의 흡수형 통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합의형 모델은 남북한 상당 기간의 공존을 전제로 북한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에 의한 연착륙 형태를 거쳐 한반도의 두 개의 국가가 남북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국가체제로 통합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모델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북한의 수령체제를 합의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아니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전제한 통합모델이다.

흡수통합론은 동서독 통합형태로, 북한체제의 남한체제로의 동화 흡수를 말한다. 남한 중심의 통일 시나리오의 예로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가 2002년 8월 발간한 정책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미국 정책의 청사진”으로, 미국 및 한국의 여러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동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통일국가의 등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3가지 통일 시나리오로 평화통일, 붕괴흡수통일, 전쟁통일(북한패망)로 상정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 정부의 통치권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미국 CIA가 전망한 『2015년의 세계』에서도 2015년 시기엔 통일한국이 동북아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통일비용 부담능력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현실이다. 통일비용은 체제통합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정치·사회적·문화적 통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통일의 방식과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에 따라 통일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은 상이한 두 경제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체제전환 비용 가운데 유형의 통일비용으로, 통일 이후 일정한 조정기간 동안 정부가 부담할 재정지출 성격의 비용이다. 여기에는 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이 있다. 첫째, 위기관리비용은 북한체제 붕괴로 급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관리하기 위하여 남한 정부가 초기에 지출하게 될 긴급지출 비용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재건비용은 특히 북한 지역의 생산기반 및 경제구조 확충을 위한 순수한 정부 차원의 투자비용이다. 셋째, 제도통합비용은 북한체제를 남한체제로 동화시키는 전환비용을 말한다. 넷째, 사회보장비용은 남북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비용 문제는 자칫 북한 경제의 회생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 문제를 결국은 남한 주민들이 떠맡아야 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재원조달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희생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이 통일 자체에 대한 회의적·유보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접근은 그것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설득력

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비용은 통일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경계하고 고통 분담을 사전에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재원마련 대책을 촉구하는 예방적 효과도 없지 않으나, 통일비용을 단순히 지출과 비용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다. 통일비용은 단순히 소모성 비용은 아니며, 경제재건 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출 결과 사그라져 버리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가치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비용을 통일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투자로 파악할 경우, 통일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와 통일 후 후속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투자개념에 해당된다.

3) 사회보장(제도)과 담세능력

한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비(Social Security/GDP)는 최근 3년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1.6%(2000), 2.0%(2001), 2.0%(2002)으로 추계된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GDP)는 0.5%(2000), 0.6%(2001), 0.6%(2002)이며, 사회복지서비스비율(Welfare Service/GDP)은 0.5%(2000), 0.7%(2001), 0.6%(2002)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1998년의 경우 전국적 수준에서 ‘부담 많음’(20.2%)과 ‘약간 많음’(44.5%)이 64.7%에 달해 ‘보통임’(27.7%)과 ‘부담 없음’(7.7%)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부담 많음’(26.0%)과 ‘약간 많음’(45.7%)이 71.7%로 ‘보통임’(23.5%)과 ‘부담 없음’(4.7%)과의 반응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02년도 통계조사는 1998년도에 비해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감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통일능력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확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능력을 높여나가는 정책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보장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감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통일과정에서 이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국민설득논리의 개발과 통일에 대한 미래비전을 적극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서 담세능력을 들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9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997년 37.2%에서 1998년에는 36.6%로 다소 하락했으나 90년대 들어 조세부담률은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97년 21.4%, 98년 21.1%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97년의 경우 스웨덴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51.9%로 가장 높고 뒤이어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및 벨기에 등이 45%를 상회한다. 외국의 조세부담률로 99년의 경우 일본 16.4%, 미국 22.0%, 영국 30.1%, 독일 22.9%, 프랑스 29.3%, 이탈리아 30.9%에 비해 같은 해 한국은 19.5%(99), 21.8%(00), 22.5%(01)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여 왔다.⁴³

이처럼 국제적 비교 관계에서 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점차 세계적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담세능력의 문제보다는 계층간·영역간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운영과정의 비효율성의 문제로 담세자들의 불만과 의구심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과정에서 국민의 총 조세부담률의 증가보다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국민총생산의 규모

4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1998; 2000; 2001; 2002).

43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서울: 재정경제부, 2002년 5월).

를 증대시킴으로써 북한지역의 지원과 복구에 필요한 재정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을 남한과의 비슷한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북한주민에 대한 포용능력

북한주민과 북한체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실패한 체제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수령체제는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로 이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북한체제는 결코 긍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북한체제의 희생자로 마땅히 우리가 포용해야 하는 한겨레이고 한민족의 일원이다.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일 후 우리가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남북협력은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수용과정에서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의 체제변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높다.

남한 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우선 남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요청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추진은 북한체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실패와 체제붕괴과정이 진행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충격적 동요와 집단적 탈북 사태가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는 조치들과 함께 긴급구호와 전면적인 지원정책 등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탈북 주민들의 지원정책과 사회적 안정에 대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재정적·사회적 부담과 배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남한 사회의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능력과 의지는 통일과정에서의 갈등과 후유증을 극복하고 통일국가의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관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한미동맹

가) 주한미군 병력수준

주한미군은 한-미안보동맹의 핵심고리이자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일원으로서 한국군과 함께 한미연합전력을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안정자’이자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개 보병사단을 포함한 미 제8군과 2개 전투비행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 제7공군을 기본 전투력으로 하는 주한미군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정부, 미 국방부 및 태평양사령부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유사시 한국방어를 위해 파견되는 전시증원전력들의 조기 전력화와 효과적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조직과 절차를 제공한다. 현재 3만 7천 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비롯하여 아시아 주둔 미군은 새 기술과 역량을 갖추도록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조영길 국방장관과 함께 서울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2003.11.17)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상의 의무 이행능력을 약화시키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에 최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최대한 재빠르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신속 기동군으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군의 병력 수는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한의 통일역량과 상당한 관련성을 지닌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나) 한미군사동맹 결속 수준

한미동맹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 출생한 전쟁 후 세대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미국 주도의 일방적·선도적 형태에 대한 비판과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의 보다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동안 미군의 술한 범죄 행위에 대한 비판과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던 상황에 미군 장갑차에 의한 동두천 두 여중생 희생사건은 한국의 반미감정에 불을 붙였다. 다른 한편, 남북한 화해 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진보좌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외세의존적 입장보다 민족 중심 논리를 크게 강조하였다. 이러한 민족 논리는 북한의 ‘자주’ 노선과 관련하여 남한사회에서 동맹보다 자주 노선을 강화시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9·11’ 이후 미국은 강경보수주의로 선회하면서 미국 중심의 힘에 의한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노선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북한 핵문제로 인해 ‘반전평화’를 외치는 반미친북파와 ‘반전반김’을 외치는 반북친미파

로 나뉘어 갈등이 분출되던 와중에,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한미동맹 문제가 가장 큰 정치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인의 자존심과 한국 역사에 대한 존경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등은 과연 미국의 지지와 후원 없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래이익을 위해 새로운 한미 우호관계(New Friendship)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적 부분인 군사동맹의 결속 수준은 우리의 통일능력 문제와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

III. 북한체제의 변화 추세: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정치

(1) 체제 정당성

1) 김정일 리더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1990년대 들어와 현격하게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초반 김정일 위원장을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7.70)라는 대답이 있었다. 그러나 지지도는 점점 약화되어, 김일성 사망이후 경제난과 식량난을 잘 해결하지 못하자 1995년 ‘보통이다’(5.43)로 떨어지고, 1997년에는 ‘그렇지 않다’(3.92)로 전락하였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에 들어 김정일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지지도는 대단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2년 현재까지도 계속 떨어지는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하여금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모색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김정일 위원장은 그 원인을 다시 미국의 대북압살정책과 남한의 대북강경정책에 기인하는 것처럼 상황을 유인하여 외생적 요인에 원인을 돌려 체제강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2) 조선노동당에 대한 지지도

조선로동당에 대한 지지도는 앞에서 검토한 김정일 리더십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응과 매우 유사한 속도와 방식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90년대 초반 ‘그렇다’(7.57)로 당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던 북한주민들은 95년 ‘보통이다’(5.41)로, 그리고 98년에는 ‘그렇지 않다’(3.53)의 평가를 취하였다. 따라서 당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는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극적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지지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지지도 또한 김정일 리더십 및 노동당 신뢰에 대한 지지도와 유사한 속도 및 방식으로 낮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초반 ‘그렇다’(7.29)로 남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확신하였던 북한 주민들은 95년에 들어와 ‘보통이다’(5.26)라고 응답하였고, 98년에는 ‘그렇지 않다’(3.54)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90년 북한주민들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지지도(7.29)는 김정일 리더십(7.70)이나, 노동당 신뢰(7.57)에 대한 지지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2002년 현재 체제에 대한 지지도(2.74)는 김정일 리더십(2.66)이나 노동당 신뢰(2.73)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상황적 한계를 고려할 때, 남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일방적 흡수통일은 마찰이 예상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지도

국가에 대한 지지도 또한 앞에서 검토된 리더십·당 체제에 대한 지지도의 변화양상과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자부심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은 90년에 ‘그렇다’(7.92)로 응답하였으나, 95년에 ‘보통이다’(5.69), 98년에 ‘그렇지 않다’(3.62)로 반응하였다. 90년 국가에 대한 자부심(7.92)은 김정일 리더십(7.70)·노동당 신뢰(7.57)·체제 우월성(7.2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2년 현재 상대적으로 낙폭이 가장 큰 것(2.69)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통계추정치는 탈북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지지도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한국주도의 흡수통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2) 정치적 통합성

1) 김정일과 군부의 갈등정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통제력과 관련해서는 점진적 약화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탈북동포들은 90년 김정일의 군부통제력에 대해 ‘상당히 그렇다’(8.02)고 응답하였으며, 이후 점진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2002년 현재에도 ‘보통 이상’(6.10)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군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탈북동포들은 90년에 ‘상당히 그렇다’(8.00)고 응답했으며, 2002년 현재에는 ‘보통’(5.25)정도로 신뢰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군부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통제력은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고 있는 데 비해, 군부의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는 98년을 기점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군부의 반발과 도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흡수통일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2) 권력엘리트 갈등정도

직장 또는 기관 내 집단적 이해갈등과 관련해서, 탈북동포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90년대 초반 상황에 대해 ‘보통이다’(4.96)는 평가를 내렸고, 이후 집단적 이해갈등에 대해 조금씩 인정하는 추세였으나, 2002년 현재에도 ‘보통이다’(5.90)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타 직장 또는 기관과의 집단적 이해갈등에 대해서도 크게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직장 내 갈등과 비교해 볼 때는, 90년 초반에는 더욱 낮았으나(4.59), 2002년 현재에는 ‘조금 그렇다’(6.26)고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아직은 북한에서 권력엘리트 갈등이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난과 안보난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혁신적인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효력이 없거나, 반대로 대단하게 성과를 거두게 될 때, 경제중심의 온건관료와 안보중심의 당료 및 군부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체제 효율성

1) 주체사상 이데올로기기의 퇴화정도

주체사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탈북동포들은 90년에 '상당히 그렇다'(7.35)고 평가했으나, 경제난의 점진적 심화 과정에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이후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95년 '보통이다'(5.56)의 반응을 보여주었고, 식량난에 따른 대량아사사태를 치른 이후인 99년부터 '그렇지 않다'(3.89)고 평가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주체사상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90년에는 '상당히 그렇다'(7.44)고 인정하였으나, 95년 '보통이다'(5.15) 이후 97년 '별로 그렇지 않다'(3.94)고 반응하였고, 2002년 현재는 '상당히 그렇지 않다'(2.98)고 보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 약화는 합의 또는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나, 동시에 북한주민들의 정신적·정치사상적 공백을 채울 대체제도 준비할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 당조직의 효율성 정도

상부지사의 하달정도와 관련해서, 탈북동포들은 지금까지 김정일 위원장 또는 당의 지시가 최하위 실무단위조직(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군대, 중·소대 등)까지 대체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90년에는 '상당히 그렇다'(8.13)고 평가된 이후, 94년 '그렇다'(7.24), 2002년 현재 '보

통이다(4.74)로 점차 악화되었다. 그러나 추세변화를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아직은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 하급기관에 대체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정책 방향

1) 지도자의 개혁개방 의지

김정일 위원장의 개혁·개방의지에 대해 탈북동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90년 ‘그렇지 않다’(3.64)에서 2002년 현재 ‘별로 그렇지 않다’(3.99)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미세한 변화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3.53) 이후 대단히 미약하나마 꾸준히 점진적 증가 추세를 띠기 시작하였다. 비록 흡족한 변화는 아니지만, 경제난과 식량난에 처한 김정일 위원장이 상황적 압박에 밀려 조금씩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흡수 및 합의 통일 모두 쉽지 않다. 그러나 이를 소중히 여겨 북한주민의 생활난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겠다.

2) 지도자의 통일의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의지와 관련해서, 탈북동포들은 점차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추세이다. 90년에는 ‘그렇다’(6.52)는 평가가 높았다. 그러나 96년 ‘보통이다’(5.03)는 평가가 나온 이후 계속해서 조금씩 악화된 후, 2002년 현재는 ‘조금 그렇지 않다’(3.83)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탈북동포들의 평가는 김정일 위원장이 모험적 대남 공산화 통일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낮음과 더불어, 김정일 위원장이 공존지향적 정책과 남북한 관계의 제한적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음도 시사한다. 따라서 남한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인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소극적 또는 방관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5) 정치적 분권화

1) 경제적 측면의 지방분권 정도

북한은 2002년 7월 조치를 통해 종전의 경제관리부문의 개선조치와 달리 경제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는 김정일의 경제관리 개선지침(2001.10.3)에 따라 2002년 중점과업으로 설정되어, 검토작업을 거쳐 발표된 일종의 경제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치에는 물가인금·환율 등 가격기구 대폭조정을 통한 가격체계 현실화, 개별단위의 자율권 확대와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생산의욕 및 효율성 제고, 배급제 단계적 폐지 및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사회보장 축소 등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개혁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3년 6월 이후부터 북한은 그동안 사용하지를 완강히 거부했던 ‘개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1991.2) 외에 신의주 특별행정구역(2002.9), 금강산관광지구(2002.10), 개성공업지구(2002.11)를 추가지정하고 보다 개방적인 대외경제협력도 적극 모색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 같은 조치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분권을 제한적 차원에서 허용하는 정책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혁·개방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실험은 진행 중이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 성과가 있을 시 경제적 측면의 지방분권은 제고될 것이나,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제고될 경우, 한국주도의 흡수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며, 합의통일은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2) 정치적 측면의 지방분권 정도

현 김정일 체제하에서 정치적 측면에서의 지방분권이 강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당 중앙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수령제 사회주의체제의 해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방분권 강화는 경제난 및 식량난의 효율적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채택될 수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의 지방분권 강화는 적어도 김정일 정권하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이 경우 흡수 통일 가능성은 낮다.

<표 III-1> 정치관련 설문 결과

문항	설문내용	N	평균
문	김정일라다집 '90	249	7.70
	김정일라다집 '91	247	7.64
	김정일라다집 '92	247	7.49
	김정일라다집 '93	249	7.20
	김정일라다집 '94	249	6.56
	김정일라다집 '95	247	5.43
	김정일라다집 '96	242	4.56
	김정일라다집 '97	236	3.92
	김정일라다집 '98	196	3.49
	김정일라다집 '99	129	3.31
	김정일라다집 '00	108	3.25
	김정일라다집 '01	96	2.91
	김정일라다집 '02	91	2.65
문	체제비교 '90	250	7.29
	체제비교 '91	248	7.25
	체제비교 '92	248	7.00
	체제비교 '93	249	6.72
	체제비교 '94	250	6.11
	체제비교 '95	247	5.26
	체제비교 '96	241	4.65
	체제비교 '97	235	4.18
	체제비교 '98	195	3.54
	체제비교 '99	127	3.32
	체제비교 '00	102	3.06
	체제비교 '01	98	2.84
	체제비교 '02	90	2.74
문	노동당신탁 '90	251	7.57
	노동당신탁 '91	249	7.52
	노동당신탁 '92	249	7.42
	노동당신탁 '93	250	7.10
	노동당신탁 '94	248	6.40
	노동당신탁 '95	246	5.41
	노동당신탁 '96	240	4.48
	노동당신탁 '97	233	4.00
노동당신탁 '98	191	3.53	

	노동당신뢰 '99	124	335
	노동당신뢰 '00	100	324
	노동당신뢰 '01	90	300
	노동당신뢰 '02	86	273
문4	공화국 자부심 '99	251	792
	공화국 자부심 '91	249	787
	공화국 자부심 '92	249	773
	공화국 자부심 '93	249	746
	공화국 자부심 '94	248	684
	공화국 자부심 '95	245	569
	공화국 자부심 '96	239	488
	공화국 자부심 '97	233	417
	공화국 자부심 '98	192	362
	공화국 자부심 '99	124	335
	공화국 자부심 '00	100	303
	공화국 자부심 '01	90	291
	공화국 자부심 '02	86	269
문5-1	잡단적 이해갈등 '99	224	496
	잡단적 이해갈등 '91	224	496
	잡단적 이해갈등 '92	224	499
	잡단적 이해갈등 '93	225	499
	잡단적 이해갈등 '94	224	523
	잡단적 이해갈등 '95	224	557
	잡단적 이해갈등 '96	219	560
	잡단적 이해갈등 '97	215	562
	잡단적 이해갈등 '98	178	572
	잡단적 이해갈등 '99	112	581
	잡단적 이해갈등 '00	89	590
	잡단적 이해갈등 '01	81	579
	잡단적 이해갈등 '02	78	590
문5-2	타권과 갈등 '99	218	459
	타권과 갈등 '91	216	459
	타권과 갈등 '92	217	466
	타권과 갈등 '93	218	472
	타권과 갈등 '94	218	503
	타권과 갈등 '95	218	515
	타권과 갈등 '96	211	523
	타권과 갈등 '97	206	532

	타권과 갈등 '98	169	561
	타권과 갈등 '99	107	576
	타권과 갈등 '00	88	597
	타권과 갈등 '01	79	608
	타권과 갈등 '02	74	626
문6-1	김정일 군부통제력 '90	247	802
	김정일 군부통제력 '91	245	806
	김정일 군부통제력 '92	246	797
	김정일 군부통제력 '93	246	789
	김정일 군부통제력 '94	247	767
	김정일 군부통제력 '95	245	734
	김정일 군부통제력 '96	239	690
	김정일 군부통제력 '97	233	661
	김정일 군부통제력 '98	193	630
	김정일 군부통제력 '99	122	626
	김정일 군부통제력 '00	96	630
	김정일 군부통제력 '01	87	621
김정일 군부통제력 '02	82	610	
문6-2	군부_감정일신회 '90	240	800
	군부_감정일신회 '91	238	794
	군부_감정일신회 '92	239	795
	군부_감정일신회 '93	239	785
	군부_감정일신회 '94	241	734
	군부_감정일신회 '95	240	687
	군부_감정일신회 '96	234	639
	군부_감정일신회 '97	227	616
	군부_감정일신회 '98	187	594
	군부_감정일신회 '99	119	592
	군부_감정일신회 '00	98	568
	군부_감정일신회 '01	86	548
	군부_감정일신회 '02	80	525
문7	주체사상의 필요성 '90	250	735
	주체사상의 필요성 '91	249	727
	주체사상의 필요성 '92	250	714
	주체사상의 필요성 '93	250	690
	주체사상의 필요성 '94	249	640
	주체사상의 필요성 '95	247	556
	주체사상의 필요성 '96	241	499

	주체사상의 필요성 '97	235	443
	주체사상의 필요성 '98	193	417
	주체사상의 필요성 '99	122	389
	주체사상의 필요성 '00	95	381
	주체사상의 필요성 '01	87	361
	주체사상의 필요성 '02	82	352
문8	사회주의아름 '90	250	744
	사회주의아름 '91	247	742
	사회주의아름 '92	249	722
	사회주의아름 '93	247	683
	사회주의아름 '94	248	624
	사회주의아름 '95	246	515
	사회주의아름 '96	240	458
	사회주의아름 '97	234	394
	사회주의아름 '98	194	353
	사회주의아름 '99	124	344
	사회주의아름 '00	97	316
	사회주의아름 '01	89	307
사회주의아름 '02	83	298	
문9	상부지사 하달 '90	241	813
	상부지사 하달 '91	239	807
	상부지사 하달 '92	240	788
	상부지사 하달 '93	242	765
	상부지사 하달 '94	240	724
	상부지사 하달 '95	238	654
	상부지사 하달 '96	232	615
	상부지사 하달 '97	226	566
	상부지사 하달 '98	185	532
	상부지사 하달 '99	118	529
	상부지사 하달 '00	93	505
	상부지사 하달 '01	84	506
상부지사 하달 '02	81	474	
문10	김정일 통일외지 '90	229	652
	김정일 통일외지 '91	228	649
	김정일 통일외지 '92	229	640
	김정일 통일외지 '93	227	626
	김정일 통일외지 '94	228	595
김정일 통일외지 '95	228	545	

	김정일 통일의지 '96	221	508
	김정일 통일의지 '97	215	478
	김정일 통일의지 '98	176	440
	김정일 통일의지 '99	112	433
	김정일 통일의지 '00	91	413
	김정일 통일의지 '01	82	401
	김정일 통일의지 '02	76	383
문1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0	232	364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1	229	366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2	230	363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3	230	363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4	230	356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5	230	353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6	223	365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7	219	374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8	178	385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9	116	390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00	94	397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01	83	384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02	77	399

2. 사회

(1) 대남인식

북한 주민들이 대남 적대인식을 견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나 통일로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며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경우, 남북한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 북한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면 통일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갖는 인식은 통일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편인가'라는 질문(문 13)에 대하여 1990년에는 '그렇다'(6.67)로 적대감이 높았으나, 1995년에는 '보통이다'(5.07)로 낮아졌으며, 2002년에는 '그렇지 않다'(3.25)로 더욱 완화되었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고 남북간에 다양한 교류협력이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적대감도 점차 완화된 것으로 보여 진다.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정도가 지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갖는 적대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남 적대의식의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변하는 경우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사회통제

북한에서 사회통제는 정권, 체제 및 국가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김정일이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인 고립 상황에서도 정권을 유지하고 체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물리적 강제 수단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사회통제의 유지는 북한체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북한의 사회통제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민보안성 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주민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문14). 주민통제의 수준도 1990년 이후 대체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7.83)에서 1994년(7.17)까지는 ‘그렇다’ 이상으로 통제의 수준이 높았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통제수준은 ‘보통이다’(5.0)를 향하여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 들어서도 사회통제 수준이 완화되는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보통이다’(4.98)로 나타남으로써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여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문15)에 대한 응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1990년 이후 2002년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이동의 통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1990년 거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다(2.38)는 인식이 2002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2.29). 요컨대, 북한 당국은 사회적 이완을 통제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

민약 북한 당국이 의도는 하지만 사회통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북한 주민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북한 내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확대하면서 사회통제의 수준도 점차 완화할 경우 남한과의 관계에서 보다 협력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향한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수준을 보면, 그러한 시기가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회갈등

북한이 경제적 난국에 처하게 되면서 생필품이나 여타 물질적 자원을

상대적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당·군부 정부의 간부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체제모순이 누적되면서 권력자들이 부패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그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간부들의 부정부패 현상(문17)은 이미 1990년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 북한 주민들이 느낀 간부들의 부정부패 수준은 ‘그렇다’(7.0)에 가까운 6.38로 평가되었다. 부정부패 수준은 1995년에는 7.60으로 더욱 높아졌고, 2002년에는 8.12로 ‘매우 그렇다’(9.0)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식량, 생필품과 여타 물질적 자원이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간부들의 생활상이 상대적으로 나은 데 대한 심리적 박탈감의 표현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응답은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부정부패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간부들의 부정부패 현상은 당·군·정의 간부들, 즉 지배계층과 일반 주민, 즉 피지배계층 간의 적대감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계층 간의 적대감은 1990년에는 ‘보통이다’의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4.61로 평가되었으나, 1995년에는 그 수준을 넘어섰으며(5.66), 2002년에는 ‘그렇다’(7.0)에 가까운 6.9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적대감 수준의 증대는 북한 주민들이 내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상당한 정도로 쌓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만이 현재화되는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 작동 체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질 것이다.

(4) 사회의식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조직화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추동한 중요 세력은 지식계층이었다. 중국에서도 위로 부터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인 계층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방의 경제발전 경험이나 자본주의 생산체계 및 선진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도입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북한에서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 이후 점차 ‘개혁·개방’을 향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지식층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들의 역할은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한에 있어서는 제약받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북한의 지식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북한의 지식층은 1990년에 ‘보통이다’(5.0)를 조금 넘는 5.66 정도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18). 그러나 1995년에는 ‘그렇다’(7.24)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8.37 수준으로 평가되어 ‘매우 그렇다’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는 김정일이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새로운 경제작동 양식을 도입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나, 역으로 추정해보면 북한 지식층의 개혁·개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최고위 정치지도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많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지식인층이 경제회복에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정치적, 이념적 변화를 이끌기도 하였다. 북한에

서도 지식인층의 역할이 경제개혁·개방정책에 머물지 않고 체제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경우,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평화적 통일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2> 사회관련 설문 결과

문항	설문내용	N	평균
문3	남한에 대한 적대감 '90	247	691
	남한에 대한 적대감 '91	244	690
	남한에 대한 적대감 '92	244	671
	남한에 대한 적대감 '93	246	656
	남한에 대한 적대감 '94	243	614
	남한에 대한 적대감 '95	242	552
	남한에 대한 적대감 '96	236	504
	남한에 대한 적대감 '97	233	457
	남한에 대한 적대감 '98	190	419
	남한에 대한 적대감 '99	122	405
	남한에 대한 적대감 '00	95	357
	남한에 대한 적대감 '01	86	336
남한에 대한 적대감 '02	80	307	
문4	주민통제 '90	248	794
	주민통제 '91	246	787
	주민통제 '92	246	781
	주민통제 '93	246	765
	주민통제 '94	247	731
	주민통제 '95	244	666
	주민통제 '96	238	613
	주민통제 '97	233	580
	주민통제 '98	191	549
	주민통제 '99	122	539
	주민통제 '00	94	543
	주민통제 '01	84	519
주민통제 '02	78	506	
문5	주민 이동의 자유 '90	251	264
	주민 이동의 자유 '91	247	260
	주민 이동의 자유 '92	247	261

	주민 이동의 자유 '93	248	263
	주민 이동의 자유 '94	249	263
	주민 이동의 자유 '95	245	271
	주민 이동의 자유 '96	239	286
	주민 이동의 자유 '97	234	282
	주민 이동의 자유 '98	194	284
	주민 이동의 자유 '99	121	280
	주민 이동의 자유 '00	96	268
	주민 이동의 자유 '01	84	254
	주민 이동의 자유 '02	77	244
문6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90	235	444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91	233	442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92	233	457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93	234	472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94	233	496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95	231	556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96	226	596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97	221	632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98	185	653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99	118	657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00	95	672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01	84	689
간부와 주민간 착대감 '02	77	688	
문7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90	245	617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91	243	621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92	244	632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93	243	647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94	244	694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95	241	732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96	235	770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97	227	783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98	190	797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99	122	801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00	96	796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01	84	796
일반주민 간부 부정부패 심각 '02	77	823	

3. 경제

북한의 경제부문에서의 변화는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이 가속화된 1980년대 말부터 이루어져 왔다. 변화된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는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⁴⁴ 이후 북한경제의 성격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7·1조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부문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7·1조치'의 주요 내용 및 특성⁴⁵

'7·1조치'는 배급제의 부분적인 폐지, 소비자 물가의 현실화를 통한 물가와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외화권의 폐지, 경제활동의 자율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7·1조치'로 알려진 경제 관련 변화 조치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4가지 범주(정책결정의 분권화, 소유제도의 다양화, 시장요소의 도입, 대외경제 개방)를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44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01년 10월 김정일이 당과 내각의 주요 간부들을 모아 놓고 경제관리의 변화 조치들을 하달하였다.

45 임강택,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합의와 전망」, 2002년 9월 안민포럼 월례세미나 발제문 참조

1) 정책결정의 분권화

-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 및 책임 확대: 국가의 경제사령부로서 내각은 국가경제기관들을 철저히 지도하며, 중앙과 지방, 기관 기업소들의 권한과 책임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
- 지방경제의 자율성 확대: 지방경제와 관련 시·군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한을 하향 이양하고 불필요한 제약을 해제
- 지방정부와 기업의 자율권 확대: 중앙정부의 생산계획 하달 기능을 축소하여 전략적이고 국가적인 주요 지표가 아닌 경우에는 계획수립 관련 권한과 기능을 하부 단위로 이양, 또한 생산계획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율처분권을 인정하고 일부 제품의 가격과 규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 지배인 중심체제로 전환: 기업의 의사 결정권이 '당책임자'에서 '지배인'에게 이양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총회사제도 도입: 연합기업소의 하위 공장·기업소 지도·관리 기능에 중앙의 경제지도기관의 기능을 더하여 줌으로써 자율권이 확대된 회사의 형태를 새롭게 도입

2) 시장요소의 도입

- 개인적·물적 인센티브제도 확대: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기업과 공장을 판매실적으로 평가하며, 생산실적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과 보너스를 지급(평균주의 타파)⁴⁶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는 실적평가단위를 기존의 작업반에서 분조로 축소하고, 의무수매량(30%)을

제외한 초과생산량(70%)의 자유처분권 인정

- 배급제의 축소: 7월1일부터는 식량을 제외하고는 배급하지 않기로 하여, 식량을 제외하고는 국영상점에서 화폐로 필요에 따라 구입
- 물자교류시장 도입: 공장-기업소들간에 일부 원자재와 부품들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허용
- 지방공업 생산 소비상품의 가격 자율적 제정 허용: 국가는 가격 제정 관련 원칙과 기준만을 정해주고 공장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가격일원화 원칙을 완화
- 투자결정에서 효율성 기준 적용: 북한당국이 이번 조치를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실리보장’의 성격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원을 어떻게 분배이용하는 것이 가장 리롭고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따져 보고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⁴⁷
- 가격의 현실화: 쌀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국내의 수급여건 및 국제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각종 상품과 노동 및 서비스의 가격을 생산비 개념을 고려하여 현실화⁴⁸

44 부여된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실업상태의 세대주에게는 국가가 최저생계비(200-300원)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47 이를 위해 ‘경제적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은 ‘경제적효과성’을 “생산자 원 한단위의 지출로 얻게되는 경제적실리의 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8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관리 관련 조치로 인한 북한의 물가 및 임금 인상수준 다음과 같다. ▲쌀 1kg 8전→44원(550배) ▲옥수수 1kg 6전→20원(330배) ▲돼지고기 1kg 7원→170원(24배) ▲세숫비누 1개: 2원→20원(10배) ▲버스·지하철 요금: 10전→2원(20배) ▲평양-청진 철도요금: 16원

- 계획상의 의무지표 축소: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 범주를 축소하여 전략적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지표에 국한시키고, 세부지표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도록 허용
- 금융기능의 확대: 신탁은행의 신설(구체적인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3) 대외경제 개방

- 환율의 현실화: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기존의 2.2북한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북한원의 가치를 대폭 평가절하(당시의 시장가격에 육박)
-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외국투자자의 지분을 제한의 완화(70-80%까지 허용)
- 특구 설치⁴⁹: 신의주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고 외국인에게도 입법위원 자격을 부여하며 특구의 법률제도를 향후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공포하여 이 지역을 외국인들에게 완전하게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남한기업과 남한자본을 대상으로 한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관

—500원(37배) ▲전기료 1kW: 3.5전—2.1원(60배) ▲광산 등 중노동자 월급: 240-300원—6천원(20-25배) ▲일반 노동자 평균월급: 110원—2천원(18배)

49 특구의 설치는 ‘7·1조치가 공표된 시점에서 발표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7·1조치가 주로 국내의 체제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특구 설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대외개방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광특구 설치를 공식적으로 공포하였다.

4) 소유제도의 다양화

‘7·1조치’의 특징으로 소유제도의 다양화, 즉 사유재산제도의 다양화를 본격적으로 가져올 만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은 언론을 통해 “사적소유제도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지주성을 유린구속하고 제 배를 불리우는 악독한 착취제도”라며 자본주의 사유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⁵⁰

다만 2003년 초부터 과거에 비공식적이면서도 당국의 묵인 하에 성행했던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공식화하여 새로운 시장건물을 건설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상행위를 허용하는가 하면 외국인들에게 개인의 자격으로 시내 및 시장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주장과는 달리 개인적인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대 및 다양화가 제한적이거나 허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¹

50 『로동신문』, “사적소유제도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착취수단”, 2002년 8월 18일

51 『중앙일보』, “9월 개장 평양 통일시장 외국인도 발걸”, 2003년 12월 18일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합의제 식당(동업식당)’도 등장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몇 사람이 돈을 모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식당으로 새로운 사적 경제활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북한의 경제부문 변화와 관련하여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설문 내용의 제약과 탈북자에 국한된 설문대상의 한계 때문에 이 설문 결과가 북한의 변화를 100%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변화라는 큰 흐름의 한 부분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여기에서는 설문 결과를 개혁·개방 의지와 필요성 및 기대감, 정책결정의 분권화, 시장요소의 도입, 소유제도의 다양화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1) 개혁·개방의 필요성과 기대감

북한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설문을 제시하였다. 관련 질문으로는 다음 6가지를 들 수 있다. 문11)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문12) 북한 주민들은 식량, 의복, 주거 등 생활여건에 만족하고 있다. 문18) 북한의 지식층 사람들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19-1) 북한 주민들은 남한사회의 자유와 경제발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문19-2) 북한주민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20) 북한 주민들은 북한사회에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II-3> 개혁·개방 필요성 및 기대감에 대한 설문 결과

문항	설문 내용	N	평균	문항	설문 내용	N	평균
문제 11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0	232	3.64	문제 19-1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90	244	3.16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1	229	3.66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91	243	3.19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2	230	3.63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92	244	3.33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3	230	3.63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93	242	3.60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4	230	3.33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94	239	3.99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5	230	3.53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95	240	4.39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6	223	3.65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96	234	5.05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7	219	3.74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97	230	5.65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8	178	3.85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98	189	6.35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99	116	3.90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99	118	6.93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00	94	3.97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00	95	7.42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01	83	3.84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01	86	7.52
김정일 개혁개방의지 '02	77	3.99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02	79	7.75		
문제 12	의식주 만족도 '90	251	5.23	문제 19-2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90	243	4.72
	의식주 만족도 '91	248	5.23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91	241	4.79
	의식주 만족도 '92	248	5.08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92	241	4.98
	의식주 만족도 '93	248	4.60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93	241	5.26
	의식주 만족도 '94	249	3.77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94	239	5.78
	의식주 만족도 '95	245	2.96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95	239	6.44
	의식주 만족도 '96	241	2.27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96	232	6.94
	의식주 만족도 '97	234	1.90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97	226	7.60
	의식주 만족도 '98	192	1.70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98	186	7.94
	의식주 만족도 '99	122	1.64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99	118	8.24
	의식주 만족도 '00	96	1.61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00	92	8.38
	의식주 만족도 '01	86	1.36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01	83	8.46
의식주 만족도 '02	81	1.51	일반주민 중국 개혁개방성과 인지 '02	75	8.71		
문제 18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90	240	5.63	문제 20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90	240	4.52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91	239	5.69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91	238	4.60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92	241	5.77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92	240	4.68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93	242	6.01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93	237	4.94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94	242	6.41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94	237	5.22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95	242	7.04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95	239	5.74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96	236	7.48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96	233	6.00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97	230	7.85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97	226	6.27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98	188	8.21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98	187	6.88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99	121	8.29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99	116	6.94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00	95	8.51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00	92	7.40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01	84	8.55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01	83	7.42
지식층 개혁개방 필요성 '02	77	8.69	일반주민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 기대 '02	77	7.57		

일반주민들이 개혁·개방에 거는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기대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 표현은 북한사회에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질문(문 20)에 대한 반응이 전반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사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문 12)를 통해서 현재의 경제생활에 대한 불만이 낮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김정일의 개혁·개방 의지를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결과(문 1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정일의 개혁·개방의지는 낮게 평가하는데 반해 지식층의 개혁·개방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문 18)이다. 또한 지식층의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일반주민들의 그것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지식층이 앞으로의 개혁·개방을 선도해 줄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 19-1)과 (문 19-2)는 북한주민들과 지식층이 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발전상과 중국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의 성과를 접하는 횟수와 범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반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위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1998년 이후 북한경제가 회복되었다는 일반적인 평가와 모순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 점이다. 의식주에 대한 만족도가 199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설문대상인 탈북자들이 당면한 특별한 상황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실

지로 일반주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응답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감지되는 특이한 현상은 2002년에 단행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북한주민들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설문의 결과들은 대체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크게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응답 대상이 '7·1조치' 이전에 북한을 탈출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거나, '7·1조치' 자체를 특별한 변화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는 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주민들의 중국사례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서 자본주의와 자유의 확대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라 문제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 기대감을 줄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정책결정의 분권화

북한이 개혁의 일환으로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권화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이 3가지 제시되었다. 문24) 농민들은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잉여생산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문25) 중앙정부가 각 기업소를 제대로 장악하여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27) 일반기업과 공장에서 생산과 분배과정에서의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4> 정책결정의 분권화에 대한 설문 결과

문제	설문 내용	N	평균
문 24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0	242	2.44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1	240	2.46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2	240	2.47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3	241	2.48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4	241	2.49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5	238	2.65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6	232	2.61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7	227	2.66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8	186	2.76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9	118	2.90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00	92	2.87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01	82	2.94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02	75	4.44	
문 25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90	241	5.82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91	240	5.79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92	240	5.59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93	241	5.34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94	241	4.70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95	237	4.07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96	232	3.51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97	227	3.16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98	188	2.96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99	120	3.05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00	94	3.04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01	84	2.95
중앙정부 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02	77	2.75	
문 27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90	237	4.04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91	237	4.05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92	237	4.00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93	238	3.83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94	239	3.62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95	236	3.24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96	230	3.10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97	225	2.94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98	183	2.97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99	116	2.80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00	91	3.02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01	80	3.03
일반기업 생산과 분배 결정 자율성 '02	73	3.19	

위의 질문들은 설문대상자가 주로 농민이거나 기업소나 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된 측면이 있다.

위의 설문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위축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27).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의 기업소 활동에 대한 장악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설문 결과(문25)를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장악력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자율성은 제고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와 원료 등의 결핍으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업소에 대한 장악능력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중앙정부가 생산과 분배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기업소에 실질적으로 이양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현상은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진 1999년을 전후해서 약간의 증가가 나타난 점인데, 이마저도 지속되지 못하고 바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눈에 띄이는 또 다른 부분은 농업부문에서는 경제난 외증에 미세하나마 품종의 선택과 잉여생산물의 처분에 있어서 자율권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문24). 이러한 추세는 2002년 ‘7·1조치가 발표된 해에 2배에 가깝게 증가하여 ‘7·1조치가 북한의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 증대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쌀을 비롯한 농작물 가격의 현실화(대폭 인상) 조치가 반영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7·1조치’의 효과는 일반기업의 자율성 증대부분에도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그 폭이 미세할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의 연장

선상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치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로는 부족해 보인다.

결국, 2002년에 발표된 ‘7·1조치’에 경제활동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반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분권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시장요소의 도입

북한의 경제개혁에 주목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는 부분은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이나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는 주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확대와 계획경제적 요소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7·1조치’에서도 시장요소의 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요소의 도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묻는 설문은 다음 4가지이다. 문21) 기업운영과 개인생활에서 비공식적 또는 장마당을 통해 거래되는 물건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있다. 문22)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충분한 보수가 주어진다. 문24) 농민들은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잉여생산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문26) 장마당에서의 개인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국가의 통제가 심한 형편이다.

<표 III-5> 시장요소의 도입에 대한 설문 결과

		설문 내용		N	평균			설문 내용		N	평균
문제 21		비공식적 거래 증가 '90	242	484	문제 24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0	242	244		
		비공식적 거래 증가 '91	241	488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1	240	246		
		비공식적 거래 증가 '92	242	509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2	240	247		
		비공식적 거래 증가 '93	241	534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3	241	248		
		비공식적 거래 증가 '94	240	594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4	241	249		
		비공식적 거래 증가 '95	239	675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5	238	265		
		비공식적 거래 증가 '96	233	725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6	232	261		
		비공식적 거래 증가 '97	227	766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7	227	266		
		비공식적 거래 증가 '98	187	807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8	186	276		
		비공식적 거래 증가 '99	117	798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99	118	290		
		비공식적 거래 증가 '00	93	798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00	92	287		
		비공식적 거래 증가 '01	82	811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01	82	294		
비공식적 거래 증가 '02	75	821	농민 생산과 처분의 자유 '02	75	444						
문제 22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90	245	407	문제 26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90	246	744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91	244	407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91	245	743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92	244	398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92	247	734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93	244	362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93	247	722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94	244	318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94	246	705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95	241	247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95	245	688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96	235	202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96	239	677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97	230	184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97	232	666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98	190	172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98	188	669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99	117	192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99	119	688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00	92	179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00	92	695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01	82	176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01	82	687		
일환민품의 충분한 보수 '02	76	205	개인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02	75	695						

시장요소의 도입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문 중에서 직접적인 부분은 기업소의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문22)와 농민들이 잉여생산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문24) 등이다. 이들 결과를 살펴보면, 앞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농업부문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2년에 와서 자율처분권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부문의 인센티브 제공 여부는 계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에 와서 아주 조금 증가하기는 했으나 그 폭이 미미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비공식적인 거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문21) 비제도화된 차원에서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미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점(문26)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시장요소의 도입은 비공식적인 부문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식부문에서의 변화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당국이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공식화하여 시장기능을 국가의 계획기능의 대체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과,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적인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가격이 시장가격을 고려하고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가격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북한에서의 시장요소 도입은 빠른 속도로 공식부문에까지 확산되고 또한 제도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4) 소유제도의 다양화

소유제도의 다양화부문은 북한의 변화에서 가장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1조치' 이후에 북한당국이 거듭해서 강조한 '사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유재산제도의 허용과 그 범주의 확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소유제도의 다양화는 비공식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나중에 제도화되는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유제도의 다양화는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소유제도가 다양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시된 질문은 다음 2가지이다. 문21) 기업운영과 개인생활에서 비공식적 또는 장마당을 통해 거래되는 물건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있다. 문23)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과 돈 등 개인재산이 증가하고 있다.

<표 III-6> 소유제도 다양화에 대한 설문 결과

	설문 내용	N	평균		설문 내용	N	평균
문제 21	비공식적 거래 증가 '90	242	4.84	문제 23	개인 재산 증가 '90	248	4.11
	비공식적 거래 증가 '91	241	4.88		개인 재산 증가 '91	246	4.08
	비공식적 거래 증가 '92	242	5.09		개인 재산 증가 '92	246	4.14
	비공식적 거래 증가 '93	241	5.34		개인 재산 증가 '93	247	4.24
	비공식적 거래 증가 '94	240	5.94		개인 재산 증가 '94	246	4.30
	비공식적 거래 증가 '95	239	6.75		개인 재산 증가 '95	245	4.64
	비공식적 거래 증가 '96	233	7.25		개인 재산 증가 '96	238	4.85
	비공식적 거래 증가 '97	227	7.66		개인 재산 증가 '97	232	5.02
	비공식적 거래 증가 '98	187	8.07		개인 재산 증가 '98	191	5.42
	비공식적 거래 증가 '99	117	7.98		개인 재산 증가 '99	120	5.63
	비공식적 거래 증가 '00	93	7.98		개인 재산 증가 '00	94	6.27
	비공식적 거래 증가 '01	82	8.11		개인 재산 증가 '01	84	6.63
비공식적 거래 증가 '02	75	8.21	개인 재산 증가 '02	77	6.30		

설문결과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개인의 경제활동과 기업활동에서 비공식적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문21). 그 결과 개인의 소유영역 역시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 23). 특징적인 부분은 비공식적 거래의 증가 폭에 비해서는 개인재산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국가의 개인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가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설문결과(문26)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비공식적인 거래는 경제난으로 국가의 유통체계가 거의 마비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데 반해, 개인재산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재산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폭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소유재산의 영역 확대와 그로 인한 제도화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초부터 공식화된 ‘종합 시장’이 개장되면서 개인들이 매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식당이나 상점 등과 같은 업종에서 개인들이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유제도의 다양화는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제도화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소유제도를 다양화하는 문제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V. 통일에 측모형: 북한변수 중심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는 경제체제, 정치, 사회, 군사, 대외관계를 포함한 북한체제의 전 부문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즉,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에서부터 점차로 자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체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남북한의 통일은 북한체제의 원형이 많이 침식할수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가까워질수록 가능해지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각 부문 중에서 북한체제의 침식과 자본주의와 자유화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판별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관찰은 언제 통일이 가능할지를 예측하게 해 준다.

통일에측모형에 사용될 변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실태조사에 사용된 설문자료⁵²(후보변인)들을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많은 변인들내에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인 특성(차원)을 밝혀내고, 또 이들 변인들 중에서 의미 있는 변인을 선별하였다. 요인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자들 사이의 상호독립성을 가정함으로써 변인들 사이의 중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제거되는 직각회전방법을 채택하였다. 요인분석은 많은 변인들을 상호응집양상에 따라 소수의 요인(차원)으로 축소⁵³시켜 주기 때문에, 상정한 30개 변인

52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실태에 관한 의식조사를 수행하여, 약 30문항에 대하여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10점등 1-10점 사이의 점수를 연도별로(199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기입하도록 하였다.

53 요인분석방법에서 각 요인의 유의성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요인이 갖고 있는 Eigenvalue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요인이 의미 있다고 결

들이 다음 <표 IV-1>과 같이 8개의 상이한 차원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⁵⁴이 0.5이상인 변인들만을 의미있는 변인으로 간주하여 선별하였다.⁵⁵

이상과 같이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1) 체제응집력, 2) 남한체제동경, 3) 김정일의 체제장악력/통제력, 4) 경제의 정상화, 5) 경제의 자율화, 6) 사회갈등, 7)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지, 8) 주민이동의 자유 등 8가지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별로 선별된 변인들만을 이용하여 통일예측 모형 구축을 위한 요인별 지수⁵⁶를 산정하였다. 또 이렇게 작성된 요인별 지수를 이용하여 최종 통일지수를 산정하였다.⁵⁷

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도 Eigenvalue가 1.0 이상인 요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54 요인적재값은 +1.0에서부터 -1.0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러한 요인적재값이 크면 클수록 요인(factor 혹은 dimension)과 변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55 그러나 비록 0.5이상의 요인적재값을 가졌다하더라도 각 요인의 이론적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요인은 제외하였으며, 0.5미만인 변인이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포함시켰다. 즉, 김정일 군부통제력 변인은 요인1과 요인3 모두에 0.5이상의 요인적재값을 가졌지만, 요인 3에 포함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요인 3에 포함시켰으며, 간부와 주민간 적대감 변인은 요인적재치가 0.401로 기준값인 0.5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회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이론적인 유의미성을 가짐에 따라 요인 6에 포함시켰으며, 일반주민의 자본주의와 자유 확대 기대 변인 역시(0.424)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으로 판단되어 요인7(지도자와 주민의 변화 의지)에 포함시켰음을 미리 밝혀둔다.

56 요인에 선별된 변인들의 평균응답값을 총합하여 변인의 수로 나눈 값

57 이상과 같이 작성된 요인별 지수를 총합하여 총 요인의 수(8)로 나눈 값

<표 IV-1> 북한실태설문조사 요인분석 결과

문항	변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Q1	감정일 리더십	.784	-.01341	-.040	.06206	-.0017	-.051	-.084	-.014
Q2	체제비교	.778	-.195	-.0025	.127	-.05	.01225	.02284	-.073
Q3	노동당신뢰	.809	-.104	.110	.09394	-.022	-.079	.102	-.142
Q4	공화국자부심	.830	-.172	.126	.05679	-.0057	-.073	.176	-.030
Q5-1	집단적 이해갈등	-.104	-.0288	.06311	-.034	-.082	.803	.110	-.070
Q5-2	타기관과 갈등	-.097	.158	-.0810	.03401	.01841	.877	-.028	.02973
Q6-1	감정일 군부 통제력	.535	.135	.546	.008538	-.0073	.07634	-.106	.02582
Q6-2	군부-감정일 신뢰	.707	-.0485	.390	.08394	-.025	-.034	-.035	.01506
Q7	주체사상의 필요성	.742	-.055	.195	.122	.06299	-.125	.124	-.037
Q8	사회주의이념	.734	-.242	.199	.138	.00401	-.099	.150	.116
Q9	상부지시하달	.429	.01476	.627	.003528	.08120	-.165	-.080	-.173
Q10	감정일 통일외지	.447	-.023	.0329	.470	-.165	.06422	-.296	.07083
Q11	감정일 개혁개방외지	.416	-.089	-.086	.04899	.209	.143	.725	-.096
Q12	의식주민족도	.376	-.380	.0529	.333	.327	.04486	.233	.05452
Q13	남한에 대한 적대감	.492	-.397	.331	.261	-.0068	.03807	.07733	.07010
Q14	주민통제	.209	-.150	.729	.09993	-.172	.07593	-.0068	-.022
Q15	주민이동의 자유	.00782	.02441	-.121	.109	.238	.03767	-.044	.871
Q16	간부와 주민간 적대감	-.094	.220	.109	-.324	-.130	.401	-.036	.345
Q17	일반주민-간부부정부패심각	-.101	.564	.09741	-.230	-.311	.02679	-.270	.04455
Q18	지식층 개혁개방필요성	-.273	.472	.192	-.163	-.140	.02989	.238	.03616
Q19-1	일반주민-남한발전상 인지	-.241	.728	-.123	.08315	.06612	.07133	-.067	-.073
Q19-2	일반주민-중국개혁성과 인지	-.105	.765	.08981	-.040	-.124	.03705	-.0068	-.023
Q20	일반주민-자본주의와 자유확대 기대	-.236	.369	-.0810	.04258	-.0091	.160	.424	.122
Q21	비공식적 거래증가	.003466	.688	-.145	-.197	-.04	.171	-.285	-.206
Q22	일반민족의 충분한 보수	.203	-.044	-.068	.739	-.073	-.035	.115	.03323
Q23	개인재산 증가	-.07746	.455	-.00371	.136	.502	.02359	.001581	-.096
Q24	농민-생산과 처분의 자유	-.034	-.035	-.0016	.01842	.706	-.033	.244	.122
Q25	중앙정부-기업소의 생산활동 장악	.183	-.134	.197	.559	.171	-.0019	-.151	-.232
Q26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심함	.08854	.212	.137	.0188	-.663	.03898	-.042	-.300
Q27	일반기업-생산과 분배결정의 자율성	.0235	-.070	.310	.462	.397	-.057	-.121	.0485
Eigenvalue(아이겐 값)		8.305	3.027	2.131	1.633	1.288	1.195	1.120	1.087
Percent of Variance		27.684	10.091	7.104	5.442	4.233	3.984	3.732	3.622

1. 체제 응집력(요인 1)

합의형의 통일이든 흡수형의 통일이든 북한체제의 변화 또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남북한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체제응집력이 통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북한체제에 강한 응집력을 가질수록 통일은 어려워진다. 반면에 북한체제의 응집력이 떨어질수록 북한체제는 해체되거나 흡수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판별된 첫 번째 요인으로 ‘체제응집력’이라고 개념화될 수 있다. ‘체제응집력’ 요인을 구성하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공화국자부심 (.830)

노동당신뢰 (.809)

김정일 리더십 신뢰도 (.784)

체제대비교(남한대비 북한체제 선호도) (.778)

주체사상의 선호도 (.742)

사회주의이념 선호도 (.734)

이들 변인들은 요인적재치가 0.734이상으로, 요인 1에 대하여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인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변인 중에서 가장 높은 인자적재치를 가지고 있는 변인은 ‘공화국 자부심’으로서 북한주민들이 ‘공화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수록 체제의 응집력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낮아질수록 체제응집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높은 적재치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노동당신뢰도’이며, 그 다음은 ‘김정일

리더십 신뢰도'이다. 그 외에도 '북한체제 선호도', '주체사상 선호도', '사회주의이념 선호도' 등 모두가 체제응집력이라는 요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타당도가 매우 높은 변수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여부를 판단하는 분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제응집력 요인에 포함된 이들 변인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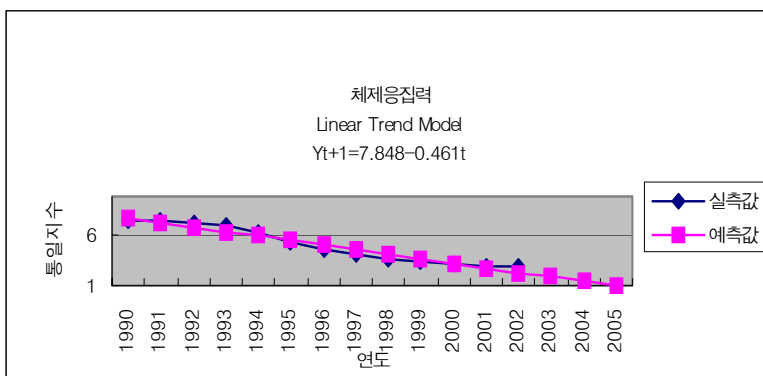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6개의 변인들로 구성된 체제응집력요인의 연도별 평균 값⁵⁸은 1990년 7.5368, 1991년 7.4738, 1992년 7.3046, 1993년 7.0232, 1994년 6.3944, 1995년 5.3976, 1996년 4.6668, 1997년 4.0788, 1998년 3.641, 1999년 3.4149, 2000년 3.1653, 2001년 2.9886, 2002년 3.001로 체제응집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체제응집력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변화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체제응집력은 2005년을 전후로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58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문항별 응답의 연도별(1990년-2002년) 평균값. 문항별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10점(매우 그렇다)사이의 점수로 직접 기입하였음.

<표 IV-2> 체제응집력 요인의 추이

연 도	요인지수
1990	7.5368
1991	7.4738
1992	7.3049
1993	7.0232
1994	6.3944
1995	5.3976
1996	4.6668
1997	4.0788
1998	3.641
1999	3.4149
2000	3.1653
2001	2.9866
2002	3.001
2003	1.855
2004	1.394
2005	0.933

<그림 IV-1> 체제응집력 Linear Trend Model



2. 남한체제 동경(요인 2)

북한이 남한과 흡수통일이 되든 합의형 통일이 되든 북한주민들이 남한체제에 대하여 동경하는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 요인분석에서 판별된 두 번째 요인은 ‘남한체제 동경’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남한체제 동경 요인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변인은 다음과 같다.

일반주민 중국 발전상 인지 (.765)

일반주민 남한 발전상 인지 (.728)

비공식적 거래증가 (.688)

남한체제 동경 요인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변인들은 중국에 대한 발전상을 인지할수록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의식이 높아지며, 동시에 남한 발전상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남한체제에 대한 동경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비공식거래 증가’는 일견 ‘남한체제 동경’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공식거래에서 꺾속말을 통하여 비로소 남한발전상을 포함한 외부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한체제의 동경 요인은 체제응집력 요인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체제응집력이 높아질수록 남한체제 동경이 낮아지며, 남한체제 동경이 높아질수록 체제응집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체제 동경 요인은 향후 통일시기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한체제 동경요인⁵⁹의 연도별 평균값은 1990년 6.746으로부터, 1991년 6.6935, 1992년 6.5195, 1993년 6.2483,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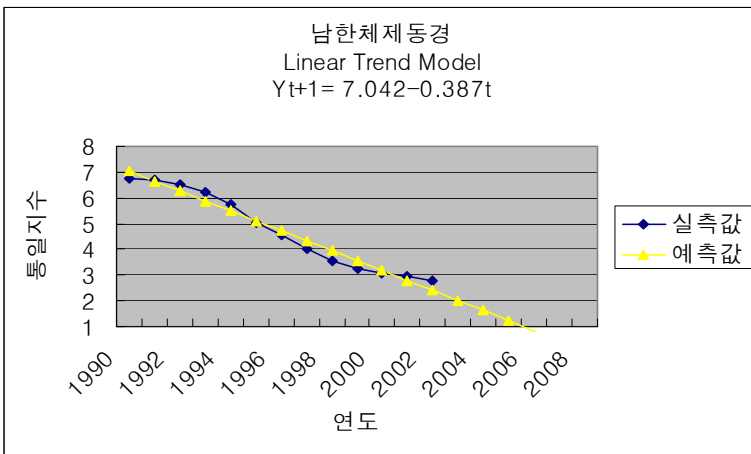
5.7575, 1995년 5.0633, 1996년 4.5851, 1997년 4.0532, 1998년 3.5696, 1999년 3.2741, 2000년 3.0739, 2001년 2.9729, 2002년 2.7827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체제에 대한 동경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남한체제동경 요인은 체제응집력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즉, 2005년을 전후로 체제응집력이 최저에 달하는 것과는 역관계를 나타내는 남한체제에 대한 동경 요인은 최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 남한 체제동경요인에 포함된 변인들은 일반주민들의 남한 발전상 인지와 중국의 개혁성과 인지, 그리고 비공식적 거래증가 변인들로서 이들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며, 매년 응답점수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종합적인 통일지수(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및 상황을 1이라 가정)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에 대한 응답점수 10점(매우 그렇다)을 1점으로 - 1점(전혀 그렇지 않다)을 10점으로 채수치화(리코딩)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리코딩한 변인들의 응답의 평균을 이용하여 요인지수를 산정하였다.

<표 IV-3> 남한 체제동경 요인의 추이

연도	요인지수
1990	6.746
1991	6.685
1992	6.5195
1993	6.2483
1994	5.7575
1995	5.0633
1996	4.3851
1997	4.0532
1998	3.5886
1999	3.2741
2000	3.0739
2001	2.9729
2002	2.7827
2003	2.011
2004	1.624
2005	1.237
2006	0.85

<그림 IV-2> 남한체제동경 Linear Trend Model



3. 김정일의 체제장악력/통제력(요인 3)

북한체제가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김정일이 체제를 장악하느냐 못하느냐이다. 체제 장악 여부에 따라서 북한체제의 해체, 흡수통일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의 체제장악력은 통일이 언제 될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장악력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

주민통제 (.729)

상부지시 하달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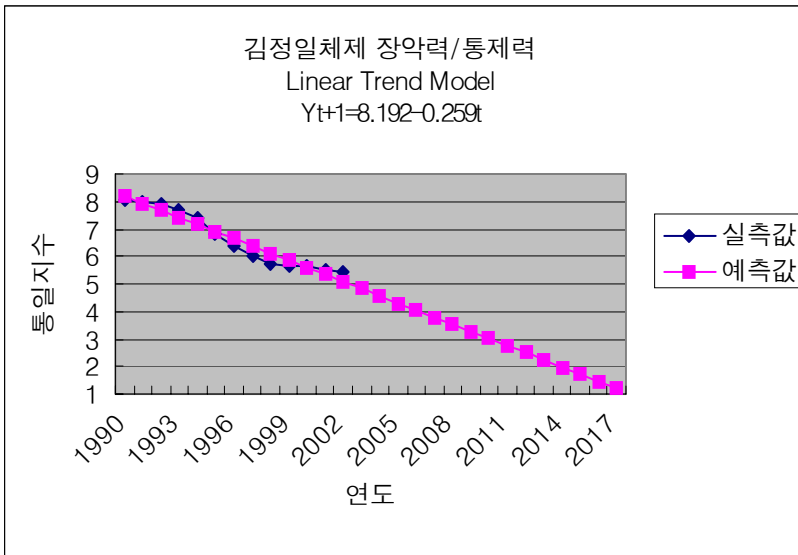
김정일 군부통제력 (.546)

김정일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이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변인인 ‘주민통제가 가장 타당성이 높은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 보위부, 안전부의 물리적 통제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실제로 국가의 물리적 통제기구가 마비되면 그것은 곧 체제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통제장치가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직장과 기관에서 상부지시가 제대로 하달되어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가 김정일의 군부통제 능력 여부이다. 서대숙 교수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주민들의 지지보다는 북한군을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⁰ 통일지수구축을 위하여 우선, 주민통제, 상부지시 하달, 김정일 군부통제력 등 체제장악력요인

을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의 평균값을 이용한 체제장악력 요인지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의 두 요인과는 달리 체제장악력 요인은 1990년에 8.0246으로부터 1995년에 6.8455를 거쳐 2002년 현재 5.438로 김정일의 체제장악이 아직까지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제장악이 이러한 추세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김정일의 체제 장악 및 통제력의 약화는 2018년경이 되어야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며, 이 때가 되어야 체제의 붕괴를 수반하는 흡수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그림 IV-3> 김정일체제 장악력/통제력 Linear Trend Model



60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 157.

<표 IV-4> 김정일체제 장악력/통제력 요인의 추이

연 도	요인지수
1990	80246
1991	80013
1992	78847
1993	77136
1994	74017
1995	68455
1996	63914
1997	60113
1998	57552
1999	56673
2000	56549
2001	55262
2002	5438
2003	4825
2004	4566
2005	4307
2006	4048
2007	3789
2008	353
2009	3271
2010	3012
2011	2753
2012	2494
2013	2235
2014	1976
2015	1717
2016	1458
2017	1199
2018	0.94

4. 경제의 정상화(요인 4)

북한체제가 현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남한으로 통일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경제문제이다. 북한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북한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북한 주민들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제 정상화의 문제는 통일예측 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경제정상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한 만큼의 충분한 보수 (.739)

생산활동 정상화 (.559)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가 정상적이며 현 체제가 유지할 만한 정당성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일한 만큼 충분한 보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평가이다. 그런 점에서 이 변인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국가전체의 차원에서는 생산활동이 정상화되느냐 못되느냐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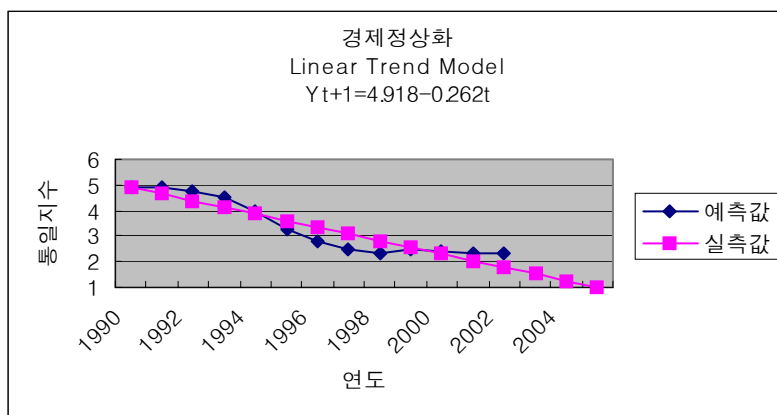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경제정상화 요인은 1990년 4.9312에서 1991년 4.9187, 1992년 4.7724, 1993년 4.4817, 1994년 3.9332, 1995년 3.2572, 1996년 2.7616, 1997년 2.4957, 1998년 2.3264, 1999년 2.4833, 2000년 2.4158, 2001년 2.3294, 2002년 2.3671로서 탈북자들의 경제 정상화에 대한 평가는 조사시점부터 다소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추세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상화에 대한 부정

적인 평가의 지속은 향후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정상화 요인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IV-5> 경제정상화 요인의 추이

연도	요인 지수
1990	4.912
1991	4.9187
1992	4.7724
1993	4.4817
1994	3.9932
1995	3.2572
1996	2.7616
1997	2.4657
1998	2.3364
1999	2.4833
2000	2.4158
2001	2.3294
2002	2.3671
2003	1.512
2004	1.25
2005	0.988

<그림 IV-4> 경제정상화 Linear Trend Model



5. 경제의 자율화(요인 5)

북한과 남한이 통일로 수렴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이 침식하고 경제가 자율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가 체제의 토대를 구성한다는 이론에서 본다면 경제의 변화가 정치체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의 자율성 확대는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경제의 자율화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민들의 생산과 처분의 자유 (.706)

개인소유 재산 증가 (.502)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통제 약화 (-.663)⁶¹

농민들의 생산과 생산물 처분에 대한 자유의 확대는 북한 경제의 자율화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서 볼 때도 농업부문 생산물의 자유처분이 사회주의경제가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첫 출발점이었다. 개인소유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도 국가소유의 사회주의체제에서 사적 소유의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는 것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한다는 추세의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은 경제의 자율화 요인⁶²은 1990년의 7.6307로부터 시작하여

61 마이너스 부호이기 때문에 '심화'를 '약화'로 변경한다.

1991년 7.6345, 1992년 7.573, 1993년 7.5007, 1994년 7.427을 거쳐 1999년 6.7842, 2000년 6.6035, 2001년 6.4333, 2002년 6.5321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의 자율성은 조사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율화의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변화 추세 역시 지극히 완만하게 하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북한경제체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율화되어가고 있지만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에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경제의 자율성은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2052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자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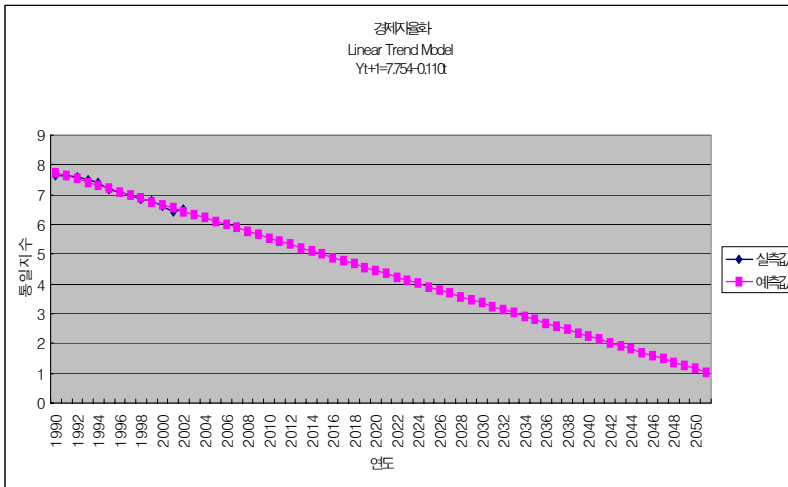
62 경제의 자율성요인에 포함된 변인들 중 농민들의 생산과 처분의 자유, 개인 소유재산의 증가 등 2가지 변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매년 응답점수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종합적인 통일지수(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및 상황)를 1이라 가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에 대한 응답점수 10점(매우 그렇다)을 1점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을 10점으로 재수치화(리코딩)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리코딩한 변인들의 응답의 평균을 이용하여 요인지수를 산정하였다.

<표 IV-6> 경제 자율화 요인의 추이

연 도	요인지수
1990	7.6307
1991	7.6345
1992	7.573
1993	7.5007
1994	7.427
1995	7.1862
1996	7.0975
1997	6.9865
1998	6.8368
1999	6.7842
2000	6.6035
2001	6.4333
2002	6.5321
2003	6.324
2004	6.214
2005	6.104
2006	5.994
2007	5.884
2008	5.774
2009	5.664
2010	5.554
2011	5.444
2012	5.334
2013	5.224
2014	5.114
2015	5.004
2016	4.894
2017	4.784
2018	4.674
2019	4.564
2020	4.454
2021	4.344
2022	4.234
2023	4.124

2024	4.014
2025	3.904
2026	3.794
2027	3.684
.	.
.	.
.	.
2045	1.704
2046	1.594
2047	1.484
2048	1.374
2049	1.264
2050	1.154
2051	1.044
2052	0.934

<그림 IV-5> 경제자유화 Linear Trend Model



6. 사회갈등(요인 6)

북한체제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집단의 갈등이 없어야 한다. 갈등이 증가할수록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만이 축적되면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기 쉽다. 사회갈등은 체제변화의 핵심적 동력이다. 북한체제에서 물리적 억압 때문에 갈등이 쉽게 집단행동으로 표출이 되지 않고 있지만, 물리적 억압이 약해지면 취약한 부위에서부터 화산의 마그마처럼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갈등의 정도는 통일을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회갈등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타기관과 갈등 (.877)

집단적 이해갈등 (.803)

간부와 주민간 적대감 (.401)

국가기관내의 타기관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기관간의 의견조율이나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울 만큼 국가차원의 불안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령 군부와 내각의 갈등, 군부와 당의 갈등, 외교부와 군부의 갈등 등이 커질수록 헤게모니 쟁탈을 위하여 무리수를 사용하게 되며, 그만큼 체제가 불안정해진다.

또한 집단적 이해갈등이 커질수록 사회는 변화의 추동력이 커진다. 가령,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집단간의 갈등은 간부층과 일반주민 간의 갈등이다. 일반주민들은 간부층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간부들은 일반주민들의 적대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천안문 사태의

발단이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저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북한에서의 간부와 일반주민간의 갈등도 향후 북한체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갈등이 심화되어서 집단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체제붕괴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독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련의 붕괴 역시 소련주민들의 집단저항으로 촉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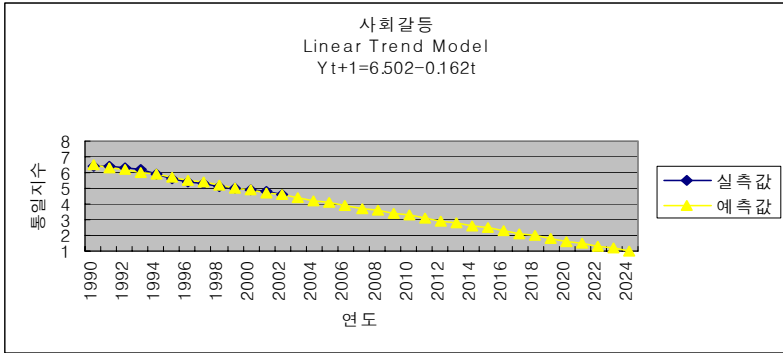
타기관과 갈등, 집단적 이해갈등, 간부와 주민간 적대감 등으로 구성된 사회갈등요인⁶³은 1990년 6.357, 1991년의 6.3558로부터 1994년 5.9469, 1995년 5.6077을 거쳐 1999년 4.9878, 2000년 4.867, 2001년 4.7557, 2002년 4.6165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갈등의 요인은 존재하고 있지만, 갈등의 표출은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그 변화 추세 역시 지극히 완만하게 하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2024년을 전후로 하여 사회적 갈등상황이 완전히 표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63 사회갈등 요인에 포함된 변인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매년 응답점수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종합적인 통일지수(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및 상황을 1이라 가정)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에 대한 응답 점수 10점(매우 그렇다)을 1점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을 10점으로 재수치화(리코딩)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리코딩한 변인들의 응답 평균을 이용하여 요인지수를 산정하였다.

<표 IV-7> 사회갈등요인 추이

연도	요인 지수
1990	6.3557
1991	6.3558
1992	6.2762
1993	6.185
1994	5.949
1995	5.6077
1996	5.4447
1997	5.3075
1998	5.1434
1999	4.9878
2000	4.867
2001	4.7557
2002	4.6165
2003	4.336
2004	4.234
2005	4.072
2006	3.91
2007	3.748
2008	3.586
2009	3.424
2010	3.262
2011	3.1
2012	2.938
2013	2.776
2014	2.614
2015	2.452
2016	2.29
2017	2.128
2018	1.966
2019	1.804
2020	1.642
2021	1.48
2022	1.318
2023	1.156
2024	0.994

<그림 IV-6> 사회갈등 Linear Trend Model



7.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 의지(요인 7)

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도자와 일반주민들이 현상을 타파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강력한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다소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남북간의 통일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 의지의 정도는 남북한 통일의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 의지 요인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은 김정일의 개혁개방의 의지와 일반주민의 자본주의와 자유확대에 대한 기대감이다.

김정일 개혁개방 의지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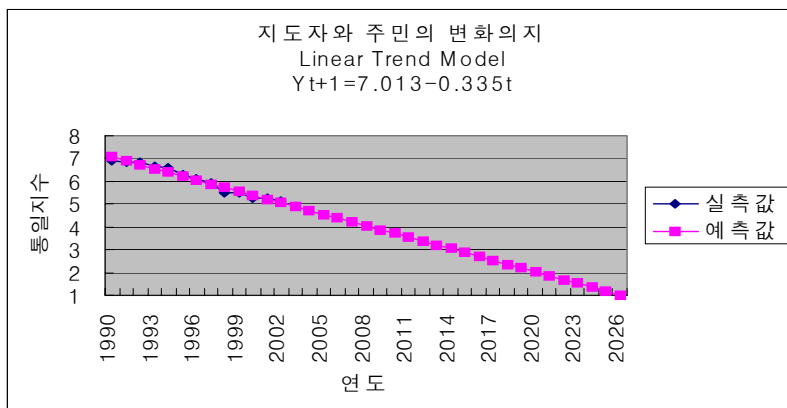
일반주민의 자본주의와 자유확대 기대 (.424)

김정일의 개혁개방의 의지가 높을수록 북한은 현재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을 변화시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방향으로의 변화를 수용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일반주민들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생활을 할수록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일의 시기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지도자와 주민들의 변화의 의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지요인의 값⁶⁴

64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지 요인에 포함된 변인들의 응답점수가 상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종합적인 통일지수(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및 상황을 1이라 가정)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에 대한 응답점수 10점(매우 그렇다)을 1점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을 10점으로 재수치화(리코딩)하

은 1990년 6.8887, 1991년 6.8347로 그다지 변화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2000년 5.26, 2001년 5.2865, 2002년 5.1145로 보통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가 유지된다면, 2026년을 전후하여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IV-7>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지 Linear Trend Model



였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리코딩한 변인들의 응답 평균을 이용하여 요인지수를 산정하였다.

<표 IV-8>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지 요인의 추이

연도	요인 지수
1990	6.8887
1991	6.8347
1992	6.8158
1993	6.6816
1994	6.5758
1995	6.2959
1996	6.0903
1997	5.9459
1998	5.5316
1999	5.4959
2000	5.26
2001	5.2855
2002	5.1145
2003	4.888
2004	4.72
2005	4.552
2006	4.384
2007	4.216
2008	4.048
2009	3.88
2010	3.712
2011	3.544
2012	3.376
2013	3.208
2014	3.04
2015	2.872
2016	2.704
2017	2.536
2018	2.368
2019	2.2
2020	2.032
2021	1.864
2022	1.696
2023	1.528
2024	1.36
2025	1.192
2026	1.024

8. 주민이동의 자유(요인 8)

북한체제의 원형은 폐쇄주의 사회이며 통제된 사회이다. 이런 폐쇄주의와 통제체제의 본질은 주민이동에 대한 통제로 나타났다. 북한의 폐쇄주의체제의 원형이 해체되고 있는 징후는 주민이동의 자유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친척집으로 또는 농촌으로 이동할 때에 아무리 강력한 통제기구도 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식량배급을 받지 못했다는 배급표를 지참하고 이동을 하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또는 장사를 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기차는 혼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차 지붕 위마저도 빼곡히 승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차 승하차시에 이루어지는 이수리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선별된 마지막 요인인 주민이동의 자유는 그 구성 변인이 '주민이동의 자유' 변인 하나 밖에 없지만, 주민이동의 자유가 북한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단면의 하나이므로 통일 예측모형의 주요요인의 하나로 간주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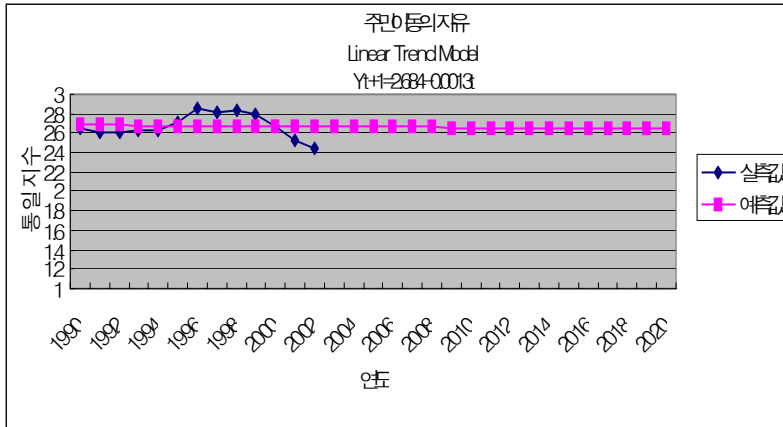
주민이동의 자유 (.871)

이러한 주민이동의 자유 요인의 값은 1990년 2.684로부터 시작하여 2002년 2.6684로 변화양상이 지극히 완만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민이동의 자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9> 주민이동의 자유 요인 추이

연도	요인지수
1990	2684
1991	26827
1992	26814
1993	26801
1994	26788
1995	26775
1996	26762
1997	26749
1998	26736
1999	26723
2000	2671
2001	26697
2002	26684
2003	26671
2004	26658
2005	26645
2006	26632
2007	26619
2008	26606
2009	26593
2010	2658
2011	26567
2012	26554
2013	26541
2014	26528
2015	26515
2016	26502

<그림 IV-8> 주민이동의 자유 Linear Trend Model



V. 북한요인에 따른 통일시기

1. 통일 지수 분류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전 장에서 살펴 본 8개의 요인들은 남북한 통일의 시간을 개략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는 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

가. 기능별 지수 분류

8개의 요인들은 기능별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1, 3, 4), 즉 체제유지가능 요인들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향후 지속적으로 체제를 장악하는가의 여부는 북한체제의 변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경제의 정상화 여부가 체제장악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장악력·통제력과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북한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체제를 지지하느냐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유지가능은 체제옹집력요인과 김정일의 체제장악력 및 통제력요인, 그리고 경제의 정상화요인으로 구성된다.

둘째는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5, 2, 6, 8, 7)이다.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체제를 현상으로 유지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체제변화 요인들은 북한 사회 내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여 혼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평화적 통일

을 상정할 경우,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통일 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표 V-1> 기능별 지수

체제유지 가능	3. 김정일의 체제장악력·통제력(정치) 4. 경제의 정상화(경제) 1. 체제응집력(사회)
체제변화 가능	5. 경제의 자율화(경제) 2. 남한체제 동경(사회) 6. 사회갈등(사회) 8. 주민이동의 자유(사회) 7.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 의지(정치)

<표 V-2> 부문별 지수

정치부문	3. 김정일의 체제장악력·통제력(정치) 7.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 의지(정치)
경제부문	4. 경제의 정상화(경제) 5. 경제의 자율화(경제)
사회부문	1. 체제응집력(사회) 2. 남한체제 동경(사회) 6. 사회갈등(사회) 8. 주민이동의 자유(사회)

나. 부문별 지수 분류

한편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8개의 요인들은 각기 경제, 사회, 정치의 한 영역을 나타내는 요인들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체제변화의 징후는 사회부문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부문을 나타내는 요인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 기능별로 차이가 있는 요인들을 부문별로 조립하면 각기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을 나타내는 지수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부문별로 북한이 현재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일시계’의 바늘이 될 수 있다.

2. 통일 시기 예측

가. 체제유지 기능 지수에 따른 예측

체제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요인들, 즉 체제응집력, 김정일의 체제장악력·통제력, 경제의 정상화 등의 요인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북한체제의 장기적인 존속을 가져올 것이다. 세 요인을 종합한 지수를 체제유지 가능 지수라고 할 경우, 향후 어떠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가?

체제유지 가능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요인지수의 합을 요인수로 나눈 값을 체제유지 가능 지수로 보았다. 10점 척도로 산출한 지수에서 10점에 가까울수록 현재의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반면 1점에 가까워질수록 현재의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체제 변화 요인에 따른 통일 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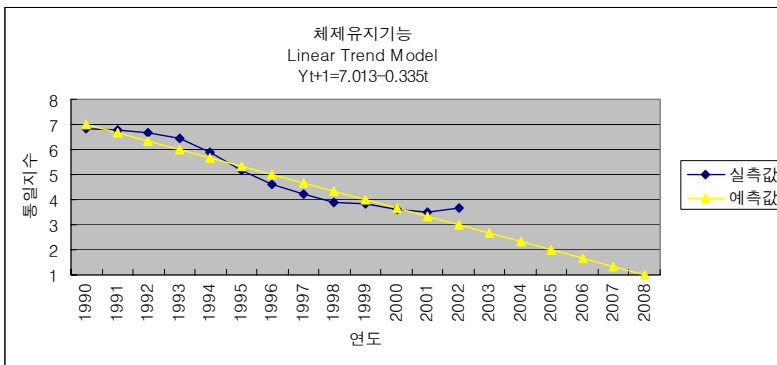
예측하기 위하여 1점을 임계점으로 결정하였다. 즉 지수가 1점 아래로 떨어질 경우, 현재의 북한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따라서 통일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물론 임계점 1은 임의적인 결정이며, 1점 이하로 지수가 떨어질 경우, 반드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북한 요인을 중심으로 할 때,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체제 유지 가능 지수는 1990년 6.8488, 1991년 6.7998, 1992년 6.6711, 1993년 6.4224, 1994년 5.9128, 1996년 4.6061, 1997년 4.2006, 1998년 3.8787, 1999년 3.8117, 2000년 3.6139, 2001년 3.4925, 2002년 3.64로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값과 실측값이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과 정도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나아간다면, 2008년을 전후로 하여 체제유지 가능 지수가 1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즉 체제응집력 및 체제의 장악력이 저하되고, 경제정상화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가 고조됨에 따라 현 북한 체제의 유지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든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V-3> 체제유지 기능 지수의 추이

연도	체제유지 기능 지수
1990	6.8488
1991	6.7998
1992	6.6711
1993	6.4224
1994	5.9128
1995	5.1699
1996	4.6061
1997	4.2006
1998	3.8787
1999	3.8117
2000	3.6139
2001	3.4925
2002	3.64
2003	2.658
2004	2.323
2005	1.988
2006	1.653
2007	1.318
2008	0.983

<그림 V-1> 체제유지 기능 Linear Trend Model



나. 체제변화 기능 지수에 따른 예측

그러면 체제변화 기능 지수에 따른 통일의 가능성 시기는 언제인가? 체제변화 기능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체제를 현상으로 유지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할 것이다. 체제유지 기능의 요인들은 통일을 중단시키거나 역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체제변화 기능의 요인들은 통일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체제변화 기능 지수는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 지수들의 산술적 평균으로 산출할 수 있다. 즉 남한체제동경 요인(요인2)과 경제의 자율화 요인(요인4), 사회갈등 요인(요인6), 지도자와 주민의 변화의지 요인(요인7), 주민이동의 자유 요인(요인8) 지수들의 총합을 요인수로 나눈 값을 체제변화기능 지수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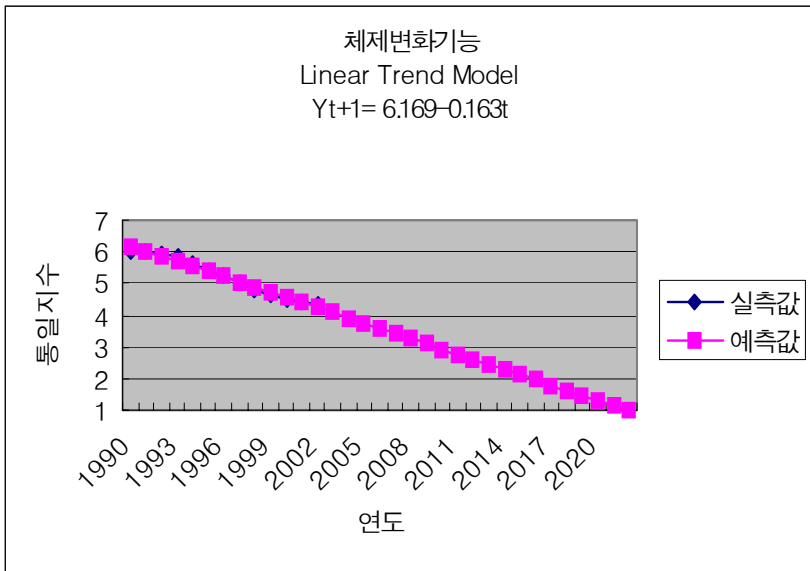
체제변화 기능 지수는 1990년 6.0362, 1991년 6.0156, 1992년 5.9567, 1993년 5.8482, 1994년 5.6442, 1995년 5.3741, 1996년 5.2264, 1997년 5.0236, 1998년 4.7964, 1999년 4.6822, 2000년 4.5283, 2001년 4.4211, 2002년 4.3088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체제변화 기능 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변화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체제변화 기능은 2022년을 전후로 1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남한체제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경제가 자율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또 사회 내에 잠재해 있던 갈등이 표출되며 지도자와 주민 모두에 체제를 변혁하고자하는 의지가 생성되고, 주민이동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체제 변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V-4> 체제변화 기능 지수의 추이

연도	체제변화 기능 지수
1990	6.0862
1991	6.0156
1992	5.9567
1993	5.8482
1994	5.6442
1995	5.3741
1996	5.2264
1997	5.0236
1998	4.7964
1999	4.6822
2000	4.5283
2001	4.4211
2002	4.3088
2003	4.077
2004	3.914
2005	3.751
2006	3.588
2007	3.425
2008	3.262
2009	3.099
2010	2.936
2011	2.773
2012	2.61
2013	2.447
2014	2.284
2015	2.121
2016	1.958
2017	1.795
2018	1.632
2019	1.469
2020	1.306
2021	1.143
2022	0.98

<그림 V-2> 체제변화 기능 Linear Trend Model



다. 통일지수에 따른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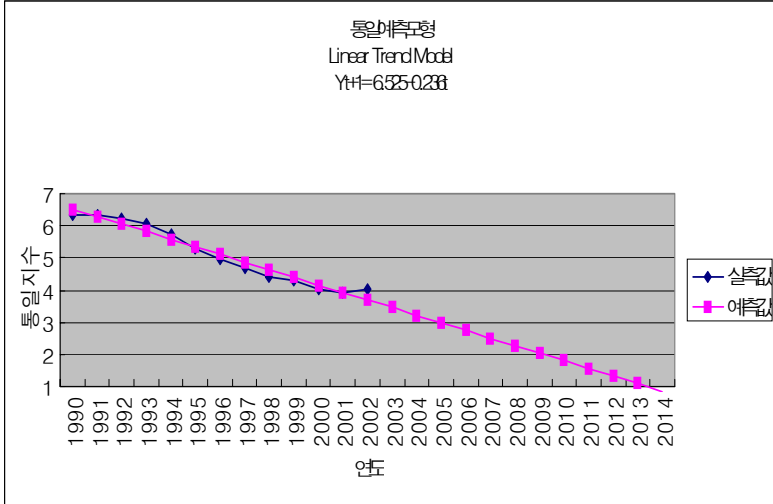
북한체제 유지 가능 지수와 북한체제 변화 가능 지수를 종합하여 우리는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예측하는 통일지수를 산정할 수 있다. 북한 요인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요인으로 선별된 총 8개 요인을 이용하여 통일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통일지수는 개별요인지수의 총합을 총 요인수로 나눈 값으로써 정의하며, 1점에 근사할수록 통일을 위한 상당한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상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통일지수의 변화는 1990년 6.3469, 1991년 6.3134, 1992년 6.2276, 1993년 6.0655, 1994년 5.7458, 1995년 5.2879, 1996년 4.9807, 1997년 4.6963, 1998년 4.4318, 1999년 4.2946, 2000년 4.0545, 2001년 3.939, 2002년 4.0428로써 나타났다. 즉 통일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으로써 점차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2014년에는 북한체제가 현재와 같은 체제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의 지수 표현인 최하점 1점 척도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남북한의 통일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V-5> 통일지수 추이

연 도	통일지수
1990	6.3469
1991	6.3134
1992	6.2276
1993	6.0655
1994	5.7458
1995	5.2879
1996	4.9807
1997	4.6963
1998	4.4318
1999	4.2946
2000	4.0545
2001	3.939
2002	4.0428
2003	3.457
2004	3.221
2005	2.985
2006	2.749
2007	2.513
2008	2.277
2009	2.041
2010	1.805
2011	1.569
2012	1.333
2013	1.097
2014	0.861

<그림 V-3> 통일이측모형 Linear Trend Model



<부 록>

북한실태에 관한 의식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A1-3		
------	--	--

안녕하십니까?

남북한 통일이러는 민족 대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지만, 이러한 민족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은 통일 대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금번에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북한실태에 관한 의식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밝히신 견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인 처리에만 사용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7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박영호(전화: 02-901-2570)

♣ 응답해 주실 때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십시오 ♣

1. 질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결표지를 포함해 1~1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응답을 기록하실 때에는 각 질문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표에 매 연도별로 점수(1-10점)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3. 1990~2002년의 기간 중 선생님께서 북한에 머무르신 때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과거(1990년에서 2002년까지) ○○님께서 북한에 체류하고 있었던 동안 북한 주민들이 북한사회(정치, 경제 등)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는 ○○님 자신의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님 직장에서의 경험에 따른 인식에 관하여 ○○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년도에 대한 응답(1-10점 사이의 점수)을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님께서서는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10점 등 1-10점 사이의 점수를 연도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1)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북한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2) 북한의 주민들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보다 더 좋은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3) 북한 주민들은 조선노동당이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4) 북한 주민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5-1) 직장 또는 내가 속해 있던 기관 내에서 노동당, 내각(정무원), 군대 간부들 사이에 개인적 의견 충돌이 아닌 집단적인 이해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 ○○님께서서는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10점 등 1-10점 사이의 점수를 년도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6-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를 잘 통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6-2) 군부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7)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이 북한 체제의 유지 및 발전과 주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8)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이념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9) 직장이나 내가 속한 기관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당의 지시나 노선이 최하위 실무단위 조직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중대, 소대 등 각 기관)까지 잘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다.

■ ○○님께서서는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10점 등 1-10점 사이의 점수를 년도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12) 북한 주민들은 식량, 의복, 주거 등 생활 여건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13)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14) 인민보안성(과거 사회안전부) 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 의한 주민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15) 북한 주민들은 (공식 통행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여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16) 노동당, 내각(정무원), 군대 등의 간부들과 일반주민들 사이에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22)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충분한 보수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23)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과 돈 등 개인 재산이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24) 농민들은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잉여생산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 ○○남께서는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10점 등 1-10점 사이의 점수를 연도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25) 중앙정부가 각 기업소를 제대로 장악하여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그렇지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않다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응답													

문26) 장마당에서의 개인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국가의 통제가 심한 형편이다.

가 들어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는 계속 존속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남북한 통일로 이어질 것이다. 2) 다른 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33) ○○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문34) ○○님의 나이 및 생년월일은?

19 년 월 일 (세)

문35) ○○님은 언제 북한을 떠나셨습니까?

년 월

문36) ○○님이 북한을 떠날 당시의 나이 및 연령집단은?

- 1) 19세 이하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문37) ○○님은 언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까?

년 월

문38) ○○님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1) 평양 2) 남포 3) 개성 4) 평안남도 5) 평안북도 6) 함경남도

7) 함경북도 8) 자강도 9) 양강도 10) 황해남도 11) 황해북도 12) 강원도

문39) ○○님의 출생지는 어디였습니까?

- 1) 평양 2) 남포 3) 개성 4) 평안남도 5) 평안북도
6) 함경남도 7) 함경북도 8) 자강도 9) 양강도 10) 황해남도
11) 황해북도 12) 강원도 13) 일본 14) 중국

문40)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1) 대학(교) 2) 전문학교(공장대학 등) 3) 중학교(고등중학교)

문41) ○○님이 북한에서 가진 주된 직업은?

- 1) 노동자 2) 농민 3) 인테리 4) 학생(대학) 5) 학생(고등중)
6) 군인(고급군관) 7) 군인(하급군관) 8) 군인(하전사) 9) 외교관
10) 대남공작원 11) 대외경제일군 12) 외화벌이일군

문42) ○○님은 어떤 계층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핵심군중 2) 기본군중 3) 동요계층 4) 적대계층

문43) ○○님은 당원이었습니까?

- 1) 당원 2) 후보당원 3) 비당원

※ 끝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님께서 작성해 주신 설문은 통일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단행본

-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ener's Sons, 1989.
- Habermas, Jurgen. *Legitimation Crisis*. Boston: Bacon Press, 1973.
- Lavigne, Mari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9.
- Lipset, Seymour Martin. *Political Ma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3.
- Rana, Pradumna B. and Naved Hamid, ed. *From Centrally Planned To Market Economies: The Asian Approach*. Hong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구종서 외.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5.
- 극동문제연구소 편. 「세계 공산권 총람」.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2.
- 김성철 외. 「북한 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영운 외.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 박영호 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 이론적 모델과

- 전문가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08.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서울: 지평, 1989.
- _____.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7.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서병철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 서울: 지식산업사, 1988.
- 여인곤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푸틴의 한반도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최춘흠,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외교·안보 분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30,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통일부, 「2003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분야별 추진현황」, 서울: 통일부, 2003.
- 통일원 「북한개요 1992」, 서울: 통일원, 1992.
-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1997.

논 문

Eberstadt, Nicholas. "The North Korean Nuclear Drama: Another 'Twenty Years' Crisis? ". Paper presented at "Korea's Rise as a Regional Power" Conference of the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Washington

D.C., October 2003.

Lepingwell, John W. R. "Soviet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August Coup". *World Politics*. Vol.44, No.4. July 1992.

Wiarda, Howard J.. "The Future of Marxist-Leninist Regime: Cuba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Durability and Direction of the Four Remaining Socialist Countries: China, Vietnam, Cuba and North Korea*.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활성화 방안".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서병철 "동서독 관계에 관한 주요 통계".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 서울: 지식산업사, 1988.

임강택.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합의와 전망". 2002년 9월 안민포럼 월례 세미나 발제문. 2002.

함택영. "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http://www.indis.re.kr>>. 2002.10.10.

기타자료

『로동신문』

『중앙일보』

『중앙일보』

『NKchosun.com』